

관급 회담

16

II

남북대화의 진행

제 1 절 남북대화 추진현황

제 2 절 남북차관급회담

제 3 절 6·17 특사면담과 남북당국공동행사 관련 실무접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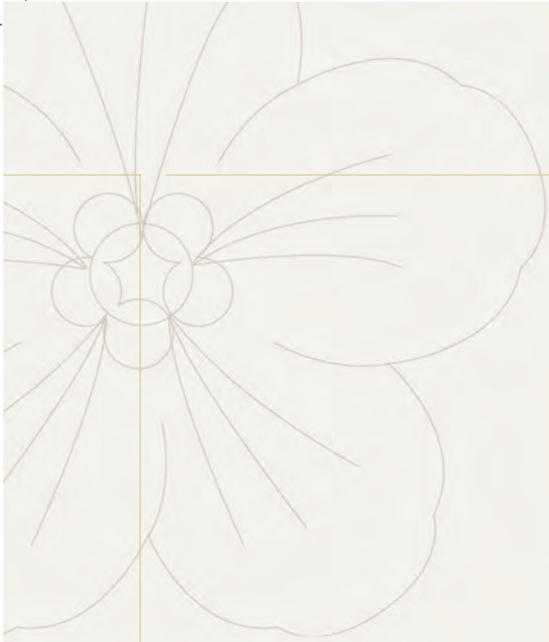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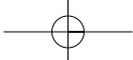
제 4 절 남북장관급회담

제 5 절 군사분야 회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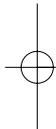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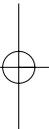
제 6 절 경제분야 회담

제 7 절 인도·사회문화분야 회담

광복 60주년이자 6·15 남북공동선언 5주년이었던 2005년도는 10개월간 중단상태에 있던 남북대화가 다시 정상화되고 다양한 분야에서 남북간의 협력이 확대된 한 해였다. 한 해 동안 분야별 남북회담을 총 34회 개최하였고 6·17면담, 장관급회담 등을 통해 6자회담을 촉진 지원하는 등 북핵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한 노력을 경주하였다.



M i n i s t r y o f U n i f i c a t i o n



II

남북대화의 진행

광복 60주년이자 6·15 남북공동선언 5주년이었던 2005년도는 10개월간 중단상태에 있던 남북대화가 다시 정상화되고 다양한 분야에서 남북간의 협력이 확대된 한 해였다. 한 해 동안 분야별 남북회담을 총 34회 개최하였고 6·17면담, 장관급회담 등을 통해 6자회담을 측면 지원하는 등 북핵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한 노력을 경주하였다. 또한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 적십자회담 등을 통해 상호호혜적 경협을 추진하는 한편 경협의 범위를 농업·수산업 등으로 확대하기로 하고, 이산가족 화상상봉 등에도 합의하는 등 남북간 협력을 확대하는데 기여하였다.

제1절 남북대화 추진현황

대화 복원의 물꼬를 튼 것은 5월 개최된 남북차관급회담이었다. 대화가 일시 중단된 지 10개월여만에 차관급 당국회담이 개최된 것은 그간 대화 재개를 위한 우리 정부의 꾸준하고 적극적인 노력이 결실을 거둔 것으로 신뢰와 원칙에 기반한 남북관계 진전이라는 참여정부의 대북정책원칙에 대해 북한이 호응했다는 의미도 있다.

남북차관급회담 합의에 따라 정부는 평양에서 진행된 6·15 남북공동행사에 당국대표단을 파견하였다. 행사기간중 우리측 단장으로 방북한 정동영 통일부장관은 대통령 특사자격으로 김정일 국방위원장을 면담하였다. 면담을 통해 양측은 북한의 비핵화 의지와 6자회담 복귀 용의를 확인하고 남북관계 정상화를 위한 실질적 조치들에 합의하였다. 6·17 면담은 북핵문제 해결이 중대 국면으로 접어든 시기에 남북이 상호 신뢰를 회복하고 남북관계를 발전시켜 나가는 전환점을 마련한 의미있는 자리였다. 이후 경색국면에 있던 6자회담이 재개되고 남북간에는 제15차 장관급회담, 8·15 남북공동행사 등이 연이어 진행되었다. 이러한 남북 화해협력 흐름속에서 2005년 한해 동안 남북회담은 정치분야 10회, 군사분야 3회, 경제분야 11회, 사회문화분야 10회 등 총 34회의 회담이 개최되었다.

남북관계 전반을 조율하고 분야별 회담을 총괄 조정하는 역할을 하는 장관급회담이 세차례 개최되었으며, 이를 통해 정부는 핵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한 북한의 호응을 유도하는 한편, 남북관계 도약을 위한 제반 현안을 협의하였다. 또한 북한 민간선박의 제주해협 통과, 남북농업협력위원회를 비롯한 경협 논의 범위 확대 등 여러 협력방안들에 합의, 남북관계를 확대 발전시킬 토대를 마련하였다. 아울러 한반도 평화보장을 위한 노력과 군사적 긴장완화 실천방안 모색에 합의

함으로써 한반도 평화정착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단초도 마련하였다.

군사분야에서는 3차례 실무회담을 개최하여 군사당국자간 서해통신연락소 운영 등 서해상의 긴장완화를 위한 실천적 조치들을 합의·시행하였다. 이와 함께 남북 공동어로수역 설정 합의 등 수산분야 협력을 통한 군사적 대치상태 해소 노력도 이어졌다.

경제분야 협력문제는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를 통해 기존 협력 사업을 안정적으로 추진하는 한편 일방적 지원에서 벗어나 상호 부족한 요소를 보완하는 새로운 방식의 경제협력에 합의하고, 농업·수산업 등으로 경협범위를 확대하는 문제가 논의되었다. 또한 그동안 미발효 상태로 있던 경협 관련 합의서가 발효되고 남북경제협력협회사무소도 개소되었다. 구체적으로는 각 실무회담들이 개최되어 세부 협의를 진행하였으며, 특히 수산협력실무협의회, 경공업 및 지하자원개발 실무협의 등으로 회담분야가 확대되었다.

사회문화·인도 분야 회담도 활발히 진행되었다. 회담을 통해 이산가족 상봉행사 및 화상상봉이 이루어졌으며, 금강산 이산가족면회소 착공식도 진행되었다. 다만 적십자회담에서 우리측이 국군포로·납북자문제를 본격적으로 제기한 데 대해 북한이 소극적 태도를 견지함으로써 실질적 진전이 이루어지지 못한 것은 아쉬운 점이다.

2005년에도 남북회담은 정례화와 함께 점차적으로 전문화·세분화되는 경향을 보였으며, 남북간 현안에 대해 구체적, 실질적인 협의가 이루어졌다. 소모적인 상호비난과 논쟁을 넘어 실사구시적 협력을 추구함으로써 실질협의 중심의 회담문화 창출노력도 계속되었다. 무엇보다 2005년도 남북대화를 통해 얻어낸 가장 큰 성과는 남북이 한반도 평화와 남북공동번영에 대한 인식을 같이하고, 그 구체적 추진방안들에 대해 본격적으로 고민하고 협의했다는 데 있다.

남북회담 개최현황

| 구 분 | | | 합계 | 2000 | 2001 | 2002 | 2003 | 2004 | 2005 |
|--------------|-----------------------|-------------|-----|------|------|------|------|------|------|
| 합 계 | | | 165 | 27 | 8 | 33 | 38 | 25 | 34 |
| 정치분야 (41) | 정상회담 | 남북정상회담 | 1 | 1 | | | | | |
| | | 남북특사접촉 | 4 | 4 | | | | | |
| | | 남북정상회담 준비접촉 | 5 | 5 | | | | | |
| | | 통신·보도 실무접촉 | 2 | 2 | | | | | |
| | | 의전·경호 실무접촉 | 1 | 1 | | | | | |
| | 남북장관급회담 | 17 | 4 | 2 | 2 | 4 | 2 | 3 | |
| | 장관급회담 실무접촉 | 1 | | | 1 | | | | |
| | 남북차관급회담 | 1 | | | | | | 1 | |
| | 특사파견 | 4 | 1 | | 1 | 1 | | 1 | |
| | 6·15 남북당국공동행사 관련 실무접촉 | 3 | | | | | | 3 | |
| | 8·15 남북당국공동행사 관련 실무접촉 | 2 | | | | | | 2 | |
| 군사분야 (34) | 남북국방장관회담 | 1 | 1 | | | | | | |
| | 남북군사실무회담·수석대표접촉 | 10 | 3 | 2 | 3 | 2 | | | |
| | 남북군사실무접촉 | 10 | | | 6 | 4 | | | |
| | 군사통신실무자접촉 | 1 | | | 1 | | | | |
| | 동해선통신선연결실무접촉 | 2 | | | | 2 | | | |
| | 장성급 군사회담 | 2 | | | | | 2 | | |
| | 장성급 실무대표회담·수석대표접촉 | 6 | | | | | 3 | 3 | |
| | 장성급 군사통신실무접촉 | 2 | | | | | 2 | | |
| 경제분야 (61) |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위원급접촉 | 14 | 1 | | 2 | 4 | 2 | 5 | |
| | 남북농업협력위원회 | 1 | | | | | | 1 | |
| | 남북경제협력실무접촉 | 2 | 2 | | | | | | |
| | 금강산관광활성화당국회담 | 2 | | 1 | 1 | | | | |
| | 남북철도도로연결실무협의회 | 5 | | | 1 | 2 | 1 | 1 | |
| | 남북철도도로연결실무접촉 | 10 | | | 3 | 5 | 2 | | |
| | 임남댐 공동조사실무접촉 | 1 | | | 1 | | | | |
| | 개성공단건설실무협의회 | 2 | | | 1 | | 1 | | |
| | 개성공단건설실무접촉 | 1 | | | 1 | | | | |
| | 임진강수해방지실무협의회 | 3 | | 1 | 1 | | 1 | | |
| | 남북전력협력실무협의회 | 1 | | 1 | | | | | |

| 구 분 | | 합계 | 2000 | 2001 | 2002 | 2003 | 2004 | 2005 |
|----------------------|----------------------|----|------|------|------|------|------|------|
| 경제분야 (61) | 남북해운협력실무접촉 | 5 | | | 2 | 1 | 1 | 1 |
| | 남북해운협력협의회 | 1 | | | | | | 1 |
| | 남북수산협력실무협의회 | 1 | | | | | | 1 |
| | 경공업 및 지하자원개발 협력 실무협의 | 1 | | | | | | 1 |
| | 원산지확인실무협의회 | 1 | | | | 1 | | |
| | 청산결제실무협의 | 3 | | | | 1 | 2 | |
| | 청산결제거래 위한 은행접촉 | 2 | | | | | 2 | |
| | 남북경제협력제도실무협의회 | 4 | | | 1 | 3 | | |
| | 남북경제협력제도실무접촉 | 1 | | | | | 1 | |
| 사회문화 인도분야 (29) | 남북적십자회담 | 6 | 2 | 1 | 1 | 1 | | 1 |
| | 남북적십자실무접촉 | 6 | | | 2 | 3 | 1 | |
| | 이산가족 화상상봉 적십자실무접촉 | 3 | | | | | | 3 |
| | 면회소건설추진단회의 | 3 | | | | 3 | | |
| | 북측 조류인플루엔자 관련 실무접촉 | 1 | | | | | | 1 |
| | 8·15 통일축구경기 실무접촉 | 2 | | | | | | 2 |
| | 단일팀 구성을 위한 남북체육회담 | 1 | | | | | | 1 |
| | 안중근의사 유해발굴 및 봉환 실무접촉 | 2 | | | | | | 2 |
| | 용천재단구호회담 | 1 | | | | | 1 | |
| | 아시아경기대회참가실무접촉 | 2 | | | 2 | | | |
| | U대회참가실무접촉 | 1 | | | | 1 | | |
| | 아테네올림픽공동입장실무접촉 | 1 | | | | | 1 | |

제2절 남북차관급회담

2004년 7월 이후 남북대화가 중단된 상태에서 2월 10일 북한의 핵 보유 선언 등으로 북핵상황이 악화됨에 따라 정부는 기회 있을 때마다 남북대화의 조속한 재개를 지속적으로 북한측에 촉구하였다. 이같은 우리 정부의 촉구에 대해 5월 14일 북한은 권호웅 남북장관급회담 북한 단장 명의의 전화 통지문을 통해 개성에서 차관급(부상급) 당국간 회담을 개최할 것을 제의해 옴에 따라 남북당국간 대화가 재개되는 계기가 마련되었다. 남북차관급회담은 당초 5월 16일부터 17일까지 개성에서 개최하기로 하였으나 협의가 예정보다 이틀 연장되어 5월 16일부터 19일까지 진행되었다.

쌍방 대표단 명단

| 구분 | 남한 | 북한 |
|------|----------------------------|--|
| 수석대표 | 이봉조(통일부 차관) | 김만길(조국평화통일위원회 서기국 부국장) |
| 대표 | 김웅희(통일부 부장) 한기범(통일부 국장) | 전중수(조국평화통일위원회 서기국 부장) 박용일(아시아태평양평화위원회 참사) |

회담에서 남북은 핵문제와 남북관계 정상화 방안 등 상호 관심현안을 중점적으로 협의하였다.

우리 정부는 북핵문제와 관련, 남북이 합의한 한반도비핵화 약속은 반드시 지켜져야 하며, 어떠한 경우에도 핵무기 보유는 용납될 수 없음을 분명히 하였다. 또한 핵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북한이 6자회담에 복귀해야 하며, 북한이 6자회담에 나올 경우 우리 정부는 핵문제 해결을 실질적으로 진전시킬 수 있는 “중요한 제안”을 마련할 것이라는 입장을 전달하였다. 또한 원칙과 신뢰에 입각한 남북관계를 정립시켜야



남북차관급회담

한다는 점을 강조했으며, 군사적 신뢰구축과 남북관계의 제도화가 필요하다는 입장도 표명하였다.

이에 대해 북한은 6·15공동선언발표 5돌기념 민족통일대축전행사에 남북 당국대표들이 함께 참가할 것을 제안하는 등 남북관계의 진전에 관심을 나타내면서도 핵문제와 관련해서는 기존 입장을 되풀이하였다. 쌍방은 두차례의 전체회의와 수차례의 수석대표접촉 및 실무대표접촉 등을 통해 의견을 조율하여 제15차 장관급회담 개최, 6·15 통일축전에 당국대표단 파견 등 3개항의 공동보도문을 채택하고 회담을 마무리 하였다.

공동보도문 요지

1. 남북은 한반도의 평화를 위해 함께 노력
2. 「6·15 통일대축전」에 장관급을 단장으로 하는 당국 대표단을 파견하며 이를 위한 실무협의 진행
3. 제15차 장관급회담을 6. 21~24, 서울에서 개최
4. 인도주의와 동포애적 차원에서 5. 21부터 북한에 봄철비료 20만톤 제공

제3절 6·17 특사면담과 남북당국공동행사 관련 실무접촉

1. 6·15 남북당국공동행사 관련 실무접촉 6·15 통일대축전(평양)에 쌍방 당국대표단을 파견하는 문제를 협의하기 위한 실무접촉이 2005년 5월 24일과 27일, 28일 개성에서 개최되었다.

쌍방 대표단 명단

| 구분 | 남한 | 북한 |
|------|----------------------------|-----------------------|
| 수석대표 | 김웅희(통일부 부장) | 전종수(조국평화통일위원회 서기국 부장) |
| 대표 | 김기웅(통일부 과장) 안진용(통일부 과장) | 정금철 김성혜 |

쌍방은 당국대표단 구성 및 규모, 체류일정, 방북경로 등에 관한 기본입장을 교환하고, 3차례에 걸친 실무협의를 통해 입장을 조율한 끝에 9개 항목의 합의서를 채택하였다.

합의서 요지

1. 쌍방은 각기 장관급을 단장으로 하는 20명의 대표를 파견, 남측은 대표단에 자문단, 지원인원, 기자를 50명 더 포함
2. 체류기간은 2005년 6월 14일부터 17일까지 3박 4일로 하며, 쌍방 당국대표단간에 공동행사를 가짐.
3. 왕래수단은 남측 비행기를 이용하며 서해직항로로 왕래
4. 편의보장, 신변안전보장, 기자 취재활동, 기타 실무절차 문제 등

한편, 북한이 6월 1일 판문점을 통해 행사에 참가하는 대표단 규모 축소를 요청해 음에 따라 방북인원은 당초 합의보다 30명이 적은 40명으로 조정되었다.

2. 6·17 특사면담 6·15남북공동선언 발표 5주년 기념행사에 남북에서 각기 장관급을 단장으로 하는 당국대표단을 파견함으로써 남북관계는 새로운 전기를 맞게 되었다. 그동안 민간차원에서만 진행되어 오던 6·15 기념행사에 당국대표단이 처음으로 참가하게 된 것이다. 행사기간 중인 6월 17일 우리측 정동영 단장은 노무현 대통령 특사 자격으로 김정일 국방위원장을 방문하여 2시간 30분 동안 단독 면담하였다.

정동영 단장은 김정일 위원장에게 노무현 대통령의 구두 메시지를 전달하고, 5월 차관급 회담에서 준비중임을 밝힌 중대제안의 내용을 상세히 설명하였다. 아울러 한반도 비핵화 원칙은 반드시 준수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북한이 6자회담에 조속히 복귀할 것과 핵폐기에 관한 전략적 결단을 내릴 것을 촉구하였다. 김정일 위원장은 중대



6·17 면담 당시 정동영 대통령 특사와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오찬장면

제안에 대해 신중하게 검토하겠다고 언급하면서 7월중이라도 6자회담에 복귀할 용의가 있음을 밝혔다. 이와 함께 대통령특사는 김정일 위원장과 남북관계 발전방향에 대해 폭넓게 협의하고, 8·15 광복 60주년 공동행사에 북한 당국대표단 파견, 장성급군사회담 개최 및 이산가족 화상상봉 등에 관해 원칙적인 합의를 하였다.

6·17 특사면담 주요내용

1. 노무현 대통령의 구두 메시지 전달

- 정동영 장관은 핵문제의 평화적·외교적 해결에 대한 신념과 철학, 남북관계 발전에 대한 의지가 포함된 노대통령 구두 메시지를 전달

2. 북핵 문제에 대한 허심탄회한 의견교환

- 정동영 장관은 △「한반도 비핵화」 원칙 준수, △대화를 통한 유익한 방향으로의 해결을 강조하며, 북한의 태도 변화를 적극적으로 유도
- 김정일 위원장은 △한반도 비핵화선언은 김일성 주석의 유훈으로 여전히 유효 △미국의 북한 인정 및 존중의사가 확고하다면 7월중이라도 6자회담 복귀 △핵문제 해결시 NPT 복귀, IAEA의 철저한 사찰 수용 용의표명 △핵물질 이전·핵실험 금지 용의 표명

3. 김정일 위원장, 장거리 미사일 폐기 용의 표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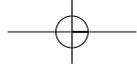
- 김정일 위원장은 미국과 수교하고 우방국가가 된다면 장거리 미사일을 폐기할 용의가 있음을 표명

4. 남북관계 정상화를 위한 실질적 조치 협의

① 8·15 남북공동행사에 북한 당국대표단 파견

- 정동영 장관은 6·15 행사에 대해 높이 평가하고 8·15 행사에 북한 당국대표단 파견을 요청
- 김정일 위원장은 비중있는 인사를 북한의 당국대표단으로 파견할 것임을 표명

② 장성급군사회담 재개 및 수산당국회담 개최



- 정동영 장관은 장성급군사회담을 재개하여, 서해상에서의 불안정한 평화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것과 함께 어업협력을 통해 공동이익을 얻을 수 있는 수산당국회담을 제의
- 김정일 위원장은 이에 동의하였으나 제2차 남북정상회담 개최문제에 대해서는 “적절한 때가 되면 이루어질 것” 이라고 원론적으로 답변
- ③ 8.15 계기 이산가족상봉 및 화상상봉 실시
 - 정동영 장관은 8·15 계기 이산가족 화상상봉을 실시할 것을 제의
 - 김정일 위원장은 금강산에서 8·15 계기 이산가족 화상상봉을 실시 하는데 동의
- ④ 남북간 철도 연결 문제
 - 정동영 장관은 남북간 철도 연결과 관련, 동해선 구간의 경우 우리 측 일부 구간(강릉-고성)에 철도가 부설되어 있지 않으며, 동해선 해안선 철도 건설의 난점을 설명
 - 이에 김정일 위원장은 기존의 동해선 우선 연결 제안을 백지 상태에서 서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

6·17 면담은 참여정부 이후 최초의 대통령 특사방북으로 핵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한 북한측의 호응을 유도함으로써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의 기반을 마련하였다. 또한 6·17 면담을 계기로 제15차 남북장관급회담, 8·15 광복60주년 남북공동행사 등이 차질 없이 진행되면서 남북 상호 신뢰증진과 남북관계 도약을 위한 발판 마련에 큰 역할을 하게 된 의미 있는 자리였다.



제 15차 남북장관급회담
 (6. 21~24, 서울) 합의에
3. 8·15 남북당국공동행사 관련 실무접촉
 따라 8·15 민족대축전에 쌍방 당국대표단을 파견하는 문제를 협의
 하기 위한 실무접촉이 2005년 7월 22일과 8월 2일 개성에서 개최되
 었다.

쌍방 대표단 명단

| 구 분 | 남 한 | 북 한 |
|------|----------------------------|-----------------------|
| 수석대표 | 김웅희(통일부 부장) | 전종수(조국평화통일위원회 서기국 부장) |
| 대 표 | 김기웅(통일부 과장) 김진홍(통일부 과장) | 정금철 김성혜 |

남북은 1차 실무접촉에서 당국대표단 규모, 체류기간, 이동경로 문
 제 등을 협의하고 기본사항에 대한 합의서를 채택한 데 이어 추가로
 2차 접촉을 진행, 행사 세부일정을 협의하였다.

합의문 요지

1. 대표단의 구성과 규모는 각기 편리한대로 하고, 단장은 6·15 민족통일
 대축전때와 같은 급으로 함.
2. 기간은 2005년 8월14일부터 17일까지 하며, 세부일정은 판문점을 통
 해 협의·확정, 쌍방 당국대표단간에 공동행사 등을 가짐.
3. 왕래수단은 북한측 비행기를 이용하며, 서해직항로로 함.

제4절 남북장관급회담

1. 제15차 남북장관급회담

제15차 장관급회담은 2005년 6월 21일부터 24일까지 서울에서 개최되었다.

쌍방 대표단 명단

| 구분 | 남한 | 북한 |
|------|---------------|------------------------|
| 수석대표 | 정동영(통일부 장관) | 권호웅(내각 책임참사) |
| 대표 | 박병원(재정경제부 차관) | 최영건(건설건설공업성 부상) |
| | 배종신(문화관광부 차관) | 김만길(조국평화통일위원회 서기국 부국장) |
| | 김천식(통일부 국장) | 신병철(내각 참사) |
| | 한기범(통일부 국장) | 전종수(조국평화통일위원회 서기국 부장) |

회담개최 1주일여 전 열린 6·15 공동행사의 성과를 바탕으로 우리 정부는 제15차 장관급회담에서 「6·17 면담」시 협의된 사항을 구체적으로 합의하고, 제2의 남북관계 도약을 위한 발판을 마련한다는 구상을 가지고 회담에 임하였다.

우리 정부는 남북한이 한반도 냉전종식, 평화정착, 공동번영을 함께 추구해나가야 함을 강조하고, 북핵문제의 평화적 해결과 제반 남북관계 현안에 대한 우리 정부의 구체적인 입장을 제시하였다. 북핵문제와 관련해서는 대화를 통해 평화적으로 조속히 해결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핵문제는 국제문제인 동시에 우리 민족문제임을 지적하고 장관급회담을 통해서 남북이 이 문제를 협의·해결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하였다. 남북관계 현안과 관련해서는 「6·17 면담」 결과를 이행하는 문제를 중점 협의하였다. 또한 여러 가지 남북협력사업에 대해서 우리 정부의 구상을 설명하고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였다. 또한 남북관계의 안정적 관리와 발전을 위해 남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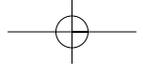
장관급회담을 분기별로 정례화해야 하며, 남북관계도 실용, 실리, 실적을 추구하는 동시에 호혜주의와 실천 중시의 정신에 따라서 추진·발전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북한은 핵문제와 관련해서는 한반도 비핵화가 김일성 주석의 유훈이며 최종목표라고 언급하고, 미국이 북한을 우호적으로 대한다면 단 한 개의 핵무기도 가지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밝혔다. 또한 8·15민족공동행사에 북한의 비중있는 당국자를 파견할 것이라고 밝히고, 8·15 광복절을 계기로 금강산 이산가족상봉행사와 화상상봉을 추진할 것을 제의하면서 이를 위한 실무접촉을 가질 것을 제의하였다. 아울러 민족공동번영을 도모한다는 원칙에 따라서 남북간 협력사업을 추진하며, 실질적인 협력이 되도록 하자고 하였다.

남북은 두차례의 전체회의와 수차례의 대표접촉을 통해 상호의견을 조율, 「6·17 면담」시 합의한 사항에 대한 구체적 이행문제를 중심으로 12개의 합의사항을 공동보도문으로 채택·발표하였다.

공동보도문 요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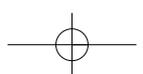
1. 8·15 남북공동행사에 당국대표단을 파견하기로 하고, 실무접촉을 7월 중 개성에서 진행
2. 한반도 비핵화를 최종목표로 분위기가 마련되는데 따라 핵문제를 대화의 방법으로 평화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실질적인 조치를 추진
3. 이산가족 금강산 상봉을 8.26부터 실시하는 것과 동시에 금강산면회소 건설 착공식을 진행하기로 하고 이를 위한 측량 및 지질조사를 7월중 완료
 - 제6차 적십자회담 8월중 개최, 전쟁시기 생사를 알 수 없게 된 사람들의 생사확인 등 인도주의 문제들을 협의
4. 8·15를 계기로 이산가족 화상상봉을 시범 개시, 이를 위한 실무접촉을 7. 10경 개성에서 개최



- 5. 을사 5조약 날조 100년이 되는 올해 이 조약이 원천무효임을 확인
 - 북관대첩비를 반환받기로 하고 이를 위한 실무적 조치 추진
 - 안중근 의사 유해발굴사업을 공동으로 추진
- 6. 제3차 장성급군사회담을 백두산에서 개최하기로 하고, 구체적인 날짜는 쌍방 군사당국이 직접 협의·결정
- 7. 서해 평화정착 촉진을 위해 경추위 산하에 수산협력실무협의회를 구성·운영하기로 하고, 이 협의회를 7월중 개최, 공동어로 등 수산협력 문제들을 협의·해결
- 8. 농업분야 협력을 추진하기 위해 농업협력위원회를 구성·운영하되 제1차 회의를 7월 중순경 개성에서 개최
- 9. 북한 민간선박들의 제주해협 통과에 합의하고, 그를 위한 구체적인 실무적 문제들을 협의·해결
- 10. 동포애와 인도주의적 견지에서 북한에 식량 제공, 구체적 절차는 경추위 제10차회의에서 처리
- 11. 경추위 제10차 회의를 7.9~12 서울에서 개최
- 12. 제16차 장관급회담을 9.13~16 백두산에서 개최, 제17차 장관급회담을 12월중 남한지역에서 개최

2. 제16차 남북장관급회담 제15차 장관급회담 이후 북한 핵문제 해결을 위한 제4차 6자회담이 재개되는 등 남북관계 진전에 긍정적인 분위기가 형성되었다. 8·15 공동행사의 성공적인 진행, 남북 군사 당국간 통신연락소 설치, 농업·수산업·경공업·광공업 등 남북경협의 확대·발전, 화상상봉 실시 등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전 분야에 걸쳐 의미있는 진전이 이루어져, 남북관계의 질적 발전에 대한 기대가 높아졌다. 이러한 여건에서 제16차 장관급회담이 9월 13일부터 16일까지 평양에서 개최되었다. 우리측 대표단은 제15차 때와 동일하였으나 북한은 김만길 대표가 맹경일 조평통 서기국 부장으로 교체되었다.

우리 정부는 ‘한반도 평화문제’에 대한 논의를 시작한다는 데 중점을 두면서 남북관계의 안정적 관리 등 장관급회담 본연의 임무를 충



실히 수행한다는 목표를 갖고 회담에 임하였다.

우리 대표단은 「6·17 면담」을 계기로 핵문제에 대한 남북간의 소통이 이루어지기 시작한 것을 평가하고 4차 6자회담 2단계회의에서도 이러한 소통과 협의를 통해 핵문제 해결의 실질적 진전을 위해 협력해야 한다는 입장을 전달하였다. 또한 한반도 비핵화 합의가 반드시 이행되어야 한다는 점과 우리 정부의 송전제안이 현재의 난관을 돌파하기 위한 구상이라는 점을 설명하면서 이러한 제안에 대한 북한의 진지한 검토를 촉구하고, 제4차 6자회담이 성과 있게 진행되어야 한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하였다.

아울러 한반도 평화의 중요성을 언급하면서 한반도 평화정착을 위한 우선적 과제로서 남북간 군사적 긴장완화 조치를 취해 나갈 것을 강조하고, 군사당국자간 대화의 조속한 개최를 촉구하였다. 또한 당면한 인도적 과제로서 국군포로와 납북자문제 해결이 필요함을 강조하고, 특히 제6차 적십자회담에서 우리측이 우선 시범사업 대상으로 제기한 2천명의 인사들에 대한 생사주소 확인사업이 조속히 실시되어야 함을 강력히 촉구하였다. 또한 상호협력 증진을 위해 이미 합의한 사항들 중에서 이행이 지체되고 있는 사업들의 조속한 추진을 강조하였다. 특히 임진강 수해방지사업이 늦어지고, 북한이 임남댐 물방류 계획을 사전에 통보하지 않은데 대해 강한 유감을 표명하였으며, 조속히 공동조사를 실시하고 수해방지 종합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하였다. 이 밖에 항공분야 협력과 과학기술분야의 협력에 대해서도 보다 구체적으로 협의해 나갈 것을 강조하였다.

이에 대해 북한은 제15차 장관급회담 이후 쌍방이 서로 합의한 사항들을 성실히 이행하기 위하여 진지한 노력을 기울여 왔으며 이 기간 적지 않은 성과들이 이룩된데 대해서 평가하면서, 6·15공동선언 발표 5돌과 광복 60년 기념행사는 온 겨레에게 민족의 화해와 단합, 통일에 대한 밝은 희망을 안겨주었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남북은 수차례의 수석대표접촉 및 대표접촉을 진행하여 한반도 평화정착과 남북 공동번영을 위한 제반 현안에 대해 협의하고 6개항의 합의사항을 공동보도문으로 발표하였다. 또한 회담 기간중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북한 핵심관계자를 별도로 면담하여 남북간 현안문제를 협의하고, 핵문제 해결에 대한 우리 정부의 입장과 미국·일본의 대북 메시지를 전달하였다.

공동보도문 요지

1. 남북관계에서 일체 체면주의를 버리고 실용주의적 입장에서 민족적 화해와 단합을 실질적으로 도모하기 위한 조치들을 취해 나가기로 함.
 - 상대방의 사상과 제도를 인정하고 존중하는 기초위에서 낡은 관념과 관행을 없애고 남북관계를 새롭게 발전시키기 위한 실질적인 조치들을 협의, 실천
2. 한반도의 공고한 평화를 보장하기 위해 노력하며, 군사적 긴장완화를 위한 실천적인 방안들을 적극 모색
 - 군사당국자회담이 개최되어야 한다는 데 인식을 같이함.
3. 민족공동의 이익과 번영, 민족경제의 통일적·균형적 발전을 촉진시키고 남북 경협을 실질적으로 추진시키기 위한 조치들을 취하기로 함.
 - ① 경제협력의 장애를 제거하고, 투자 및 유무상통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적극적인 조치들을 취해나가기로 함.
 - ② 개성공단 2단계 개발, 임진강 수해방지와 과학기술, 보건의료 등 쌍방이 필요로 하는 협력사업들을 경추위 제11차 회의와 관련 실무접촉들을 통하여 협의·해결
4. 이산가족 문제해결 등 인도주의적 사업들을 적극 추진
 - ① 11월 초에 제12차 이산가족 상봉을 실시하고, 올해안으로 2차례의 화상상봉 실시
 - ② 전쟁시기 소식을 알 수 없게 된 사람들의 생사확인문제를 적십자회담에서 계속 협의·해결
5. 『겨레말큰사전』 공동 편찬사업이 중요하다는데 인식을 같이하고, 이를 적극 지원
6. 제17차 장관급회담을 12. 13~16 제주도에서 개최

제17차 장관급회담은 12월 13일부터 16일까지 제주도에서 개최되었다. 쌍방 대표단은 제16차 장관급회담 대표단과 동일하였다. 우리 정부는 17차 회담이 광복 60주년, 6·15 5주년인 2005년도의 마지막 장관급회담이라는 점을 감안하여 지난 5년간의 성과를 점검·평가하고, 2006년도 남북관계 발전 방향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는데 중점을 두고 회담을 진행하였다.

우리 정부는 지난 5년 동안 16차례의 장관급회담을 통해서 경제협력사업, 이산가족문제, 군사적 긴장완화 등 여러 분야에서 실질적인 협력을 추진하여 남북관계를 화해협력관계로 발전시켰으며, 특히 2005년에는 한반도의 냉전구조 해체와 남북관계의 새로운 발전을 위한 토대를 구축한 점 등을 평가하였다. 그러나 군사분야회담 등 일부 분야에서 합의사항이 이행되지 않는 등 미진한 부분이 있었음을 지적하고 이에 대한 실천방안을 조속히 마련해 나갈 것을 촉구하였다. 이어서 남북관계 발전방향으로는 한반도 평화체제구축, 인도적 문제해결, 남북경제공동체 형성을 제시하였다.

한반도 평화문제에 있어서는 남북이 이를 주도적으로 협의하고 긴밀히 협력하여 해결해 나갈 것을 강조하였다. 또한 제4차 6자회담 공동성명 이행국면에서 발생한 난관을 조속히 해결해야 한다는 점과 9·19 공동성명의 틀을 살려나가는 것이 남북공동의 이익을 실현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임을 강조하면서 6자회담의 조속한 재개를 촉구하였다.

다음으로 국군포로·납북자·이산가족문제 등 과거의 냉전으로 인한 상처를 조속히 치유함으로써 민족화해와 인도주의를 실천해야 한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이산가족문제 해결을 가속화하기 위해서는 이산가족 서신교환 실시, 화상상봉, 제13차 이산가족상봉행사를 제의하고, 국군포로·납북자문제의 가시적인 진전도 촉구하였다.

아울러 남북간 경제협력을 본격화하여 공동번영의 토대를 다져나가면서 남북경협을 심화·발전시켜 남북경제공동체를 건설해나가는 점을 강조하였다. 남북간에 공동번영과 민족동질성 회복 차원에서 개성공단 활성화를 위한 법제도 정비, 그리고 경의선·동해선철도의 조속한 이용, 개성역사지구의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를 위한 협력 등 실천방안도 제시하였다.

북한은 2005년 한해에 6·15공동선언 5주년, 광복 60주년 공동기념 행사와 「6·17 면담」 등을 통해서 남북관계 발전에서 새로운 국면이 마련되었다면서 군사당국자회담, 선전수단철폐, 서해 함대간 직통전화개설 등 남북 사이에 무력충돌의 위험을 막고 공고한 평화를 이루기 위한 의미있는 진전이 이루어졌다는 점을 평가하였다. 또한 화상상봉 실시, 경협협회사무소 개설, 개성시범관광, 북관대첩비 반환 등 다양한 분야에서 대화와 교류협력이 활성화되었다는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하였다. 이러한 평가를 토대로 2006년에는 상대방을 인정하고 존중하는 바탕위에서 상대방에 대한 비난중지, 상대방을 방문하고 있는 자기측 주민들에 대한 방문지 제한 해제 등 필요한 조치들을 취



제17차 남북장관급회담

해나갈 것과 모든 합동군사연습을 중지할 것을 요구하였다. 또한 남북경제협력을 “우리민족끼리 정신”에 맞게 협력사업을 적극적으로 발전시켜나가자고 제의하였다. 아울러 새해 음력설을 계기로 해서 이산가족상봉과 화상상봉을 실시하자는 실천과제를 제시하였다.

남북은 수차례의 수석대표접촉 및 대표접촉을 진행하여 향후 남북 관계를 한 단계 높게 발전시켜나가자는 데 공감대를 이루고 핵문제, 군사적 긴장완화문제, 경협확대문제, 이산가족 문제 등 주요 현안문제를 협의하여 9개항의 합의사항을 공동보도문으로 발표하였다.

공동보도문 요지

1. 6·15 공동선언의 정신에 맞게 민족적 화해와 단합을 저해하는 대결시대의 낡은 관념에서 벗어나 상대방의 사상과 체제를 인정하고 존중하여야 한다는데 인식을 같이하고 그를 위한 실천적 조치들을 취해나가기로 함.
2. 한반도 비핵화를 위해 제4차 6자회담 공동성명이 조속히 이행되어야 한다는데 견해를 같이하고 핵문제가 민족공동의 안전과 이익에 부합되게 평화적으로 해결되도록 적극 협력
3. 한반도에서의 군사적 긴장완화와 평화를 보장하기 위한 적극적이며 실천적인 노력을 기울이기로 함. 이와 관련하여 군사당국자회담을 새해 들어 조속히 개최
4. 민족공동의 이익과 번영, 민족경제의 균형적·통일적 발전을 위하여 남북 경제협력을 새로운 단계로 확대발전
 - ① 남북 경제협력이 민족내부의 협력사업이라는 원칙 아래 지역·업종·규모면에서 투자와 협력을 확대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조치를 취해 나가기로 함.
 - ② 개성공단 2단계 개발과 통행·통관·통신, 경의선·동해선 열차 시

협은행 등의 조속한 추진에 인식을 같이하고, 경추위를 통해 협의·
해결해 나가기로 함.

5. 새해 음력설을 계기로 인도주의사업들을 적극 추진

- ① 2월안으로 적십자회담을 개최, 상호 관심을 갖는 인도주의문제들을
협의·해결
- ② 2월말경 제4차 이산가족 화상상봉 실시 및 3월말경 제13차 이산가
족 상봉행사 금강산 진행

6. 태권도의 통일적 발전을 위하여 세계태권도연맹과 국제태권도연맹간
의 긴밀한 협력이 이루어지도록 적극 지원

7. 개성지구 역사유적의 세계문화유산 등록 및 보존·관리사업에 서로
협력

8. 일본으로부터 되찾아온 북관대첩비를 빠른 시일 안으로 원소재지인
북측지역으로 옮기는 조치를 취하기로 함.

9. 제18차 남북장관급회담을 2006.3.28~31 평양에서 개최

제5절 군사분야 회담

제15차 장관급회담에서 제3차 장성급회담을 백두산에서 개최하기로 합의함에 따라 7월과 8월 관문점에서 두차례 실무대표회담을 개최하였다. 장성급군사회담 실무대표회담 및 수석대표접촉을 통해 군사분계선 지역 선전수단 제거, 서해상 통신연락소 운영개시 등 군사적 긴장완화를 위한 실질적 진전을 이루어 냈으나 제3차 장성급군사회담 개최 일정을 확정하지는 못하였다. 남북은 제17차 장관급회담에서 군사당국자회담을 새해 들어 조속히 개최하기로 합의하였다.

1. 남북장성급군사회담 실무대표회담

가. 남북장성급군사회담 제3차 실무대표회담 | 제15차 남북장관급회담에서 합의된 제3차 남북장성급군사회담 개최문제를 협의하기 위한 군사실무대표회담이 7월 20일 관문점에서 개최되었다.

쌍방 대표단 명단

| 구분 | 남한 | 북한 |
|------|----------------------------|--------------------------------|
| 수석대표 | 문성묵(국방부 대령) | 유영철(인민무력부 대좌) |
| 대표 | 김진영(국방부 대령) 엄현성(국방부 대령) | 박기용(인민무력부 상좌) 엄창남(인민무력부 상좌) |

회담에서 쌍방은 제2차 장성급군사회담('04.6.3~4, 설악산)에서 합의한 「서해해상에서 우발적 충돌방지와 군사분계선 지역에서의 선전활동 중지 및 선전수단 제거에 관한 합의서」에 따른 선전수단제거가 2004년 8월 15일까지 완료되지 않는지만 쌍방이 합의 이행을 위해 성실히 노력하여 2단계 선전수단 제거가 완료된 것을 평가하였다.

그리고 2004년 7월 이후 중단되었던 3단계 선전수단 제거를 2005년 7월 25일부터 재개하여 8월 13일에 완료하기로 합의하였다.

서해 해상에서의 우발적 충돌방지를 위한 통신연락소 설치에 대해 북한은 8월 13일부터 운영을 시작하고 이를 위해 8월 10일 오전 9시에 통신선로를 연결하여 10시에 시험통화를 하자고 제의하였고 우리측은 이를 수용하였다. 제3차 장성급군사회담 개최에 대해서는 남북이 조속한 시일내에 백두산에서 개최한다는 데 의견일치를 보았으나 구체적 일정은 삼지연 일대의 도로공사 관계 등을 고려하여 추후 논의하기로 하였다.

남북한은 3단계 선전수단 제거결과 확인 등 제반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제4차 실무대표회담을 8월 12일 오전 10시에 관문점 북측 지역 통일각에서 개최하기로 하고 회담을 종료하였다.

나. 남북장성급군사회담 제4차 실무대표회담 | 7월 20일 개최된 남북 장성급군사회담 제3차 실무대표회담에서 군사분계선 지역에서의 3단계 선전수단 제거를 7월 25일부터 8월 13일까지 실시하고 제4차 실무대표회담에서 그 결과를 확인하기로 합의함에 따라 8월 12일 남북 장성급군사회담 제4차 실무대표회담이 관문점 북한 지역 통일각에서 개최되었다.

쌍방은 군사분계선지역에서의 상대측을 향한 3단계 선전수단 제거 작업을 7월 25일부터 8월 13일까지 실시하기로 한 제3차 실무대표회담 합의사항의 이행상황을 검토한 결과, 서로 상대측 지역에서 이행된 3단계 선전수단 제거가 모두 완료되었음을 확인하였다.

쌍방은 제2차 남북장성급군사회담에서 군사분계선 지역에서 상대측을 향한 선전활동을 중지하고 선전수단을 제거하기로 합의한 이후, 3단계에 걸친 선전수단 제거 작업을 성실히 이행하여 모든 선전수단이 제거되었음을 확인하고 앞으로도 군사분계선 지역에서 상대측을

향한 선전을 중지하고 선전수단을 설치하지 않기로 한 합의를 존중하고 준수하기로 하였다.

제3차 장성급군사회담과 관련하여 북한이 회담 개최를 위한 여건이 조성되지 못하였다고 밝힘에 따라, 쌍방은 구체적인 일정협의를 차후 회담에서 진행하기로 하고 회담을 종료하였다.

다. 남북장성급군사회담 실무대표회담 수석대표접촉 | 11월 3일 판문점 평화의 집에서 개최된 남북장성급군사회담 실무대표회담 수석대표 접촉에서는 제3차 장성급군사회담 개최에 대해 협의하였다. 쌍방은 장성급군사회담을 개최한다는 기본입장에는 합의하였으나 북한의 소극적 자세로 구체적 일자를 확정하지 못하고 회담을 종료하였다.

제6절 경제분야 회담

경제분야에서는 제10차 경제협력추진위원회 회의를 시작으로 남북농업협력위원회, 수산협력실무협의회, 남북철도·도로연결실무협의회, 남북해운협력협의회, 경공업 및 지하자원개발 협력 실무협의 등 총 11차례 회담이 개최되었다. 이를 통해 남북한은 기존 경협사업의 안정적 추진과 함께 상호호혜적인 새로운 경협방식 추진과 농업·수산업 등 경협확대에 합의하였으며 남북경협협회사무소 개소·운영, 9개 경협합의서 발효 등 제도적 기반도 구축했다. 또한 경추위 산하의 농업, 수산업, 해운, 철도, 경공업 등 분야별 실무협의를 통해 구체적 이행방안을 활발히 협의해 나갔다.

1.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 및 위원급 접촉

가.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 제10차 회의 | 당초 2004년 8월 31일부터 9월 3일까지 개최될 예정이었던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 제10차 회의는 북한의 회담중단으로 일년 가까이 열리지 못하다가 2005년 7월 9일부터 12일까지 서울에서 개최되었다.

쌍방 위원 명단

| 구분 | 남한 | 북한 |
|-----|--|---|
| 위원장 | 박병원(재정경제부 차관) | 최영건(건설건설재공업성 부상) |
| 대표 | 박홍렬(통일부 상근회담대표) 전병성(건설교통부 수자원국장) 심호진(해양수산부 어업자원국장) 배국환(기획예산처 재정정책기획관) 오광세(국무총리실 심의관) | 조현주(민족경제협력위원회 실장) 방강수(민족경제협력위원회 책임참사) 진철(국가계획위원회 국장) 박정성(철도성 대외철도협력국장) |

제10차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
종결회의



우리 정부는 남북간 경제협력은 합의된 사항들이 성실히 이행될 때 이를 바탕으로 새로운 협력사업을 발굴하여 추진할 수 있음을 강조하면서 주요 경협사업에 대한 세부적인 추진일정과 방안들을 제안하였다. 구체적으로 우리 정부는 남북경제협력협약사무소 개설 및 철도시험은행, 도로개통식 개최, 수산협력, 9개 남북경협합의서 발효와 후속조치, 개성공단 사업, 임진강 수해방지 사업, 원산지 확인 및 청산결제 시행, 경제시찰단 상호방문과 경제연구소간 교류, 과학기술협력, 남북간 직선항공로(서울-평양) 이용 문제 등을 협의 의제로 제시하였다.

북한은 남북경제협력사업을 활성화하여 민족경제를 균형적으로 발전시켜 나가자고 하면서 남과 북이 필요하고 할 수 있는 분야에서부터 경제협력사업을 새로운 방식으로 시작하자고 주장하였다. 구체적으로는 경공업 제품생산용 원자재 제공 및 아연·마그네사이트·린정광·석탄 부문의 협력 문제, 수산부문 협력 문제, 개성공업지구 건설 및 철도연결공사, 쌀제공 문제,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 운영방식 개선 문제를 협의 의제로 제시하였다.

북한이 제시한 협의의제에 대해 우리 정부는 그동안 일방적 지원 성격이 강했던 경협사업을 쌍방이 보유하고 있는 자원과 자본·기술을 동원하여 상호 필요로 하는 것을 ‘주고 받는’ 협력의 형태로 전환시켜나가면 남북 모두에게 이익이 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따라 우리 정부는 우리가 보유하고 있는 자원과 자본·기술을 동원하여 경공업 원자재를 제공해주고 북한은 그 대가로 지하자원개발 협력을 보장해주는 ‘상호보완적’ 협력 구도를 제시하여 합의문에 반영하였고 8월중 평양에서 실무자간 협의를 진행하기로 합의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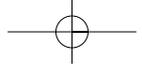
또한 쌍방 모두 중요한 협의 의제로 제기한 남북경제협력협회사무소 개설, 수산협력 문제와 관련하여 9월중 개성에 경제협력협회사무소를 설치·운영키로 하고 「남북경제협력협회사무소 개설·운영합의서」를 채택하였다. 또한 경추위 산하에 남북수산협력실무협의회를 구성하여 7월중 제1차회의를 개최하기로 합의하였다.

이와 함께 기합의 사항인 철도·도로 연결사업, 임진강수해방지사업, 개성공단 건설, 경제시찰단 방문 문제, 9개 경협 관련 합의서 발효 문제 등도 관련 세부일정 등에 합의하였다. 새로운 협력사업인 과학기술협력 문제는 문서교환방식으로 협의해 나가기로 하였으며, 북한 민간선박의 제주해협 통과 문제는 제15차 장관급회담에서 합의한 바에 따라 8·15 계기로 실현하기로 합의하였다.

한편 북한이 제15차 장관급회담에서 요청한 쌀 지원 문제는 북한의 식량난을 감안하고 인도적 문제라는 점을 고려하여 50만톤을 차관 방식으로 제공하기로 하는 한편, 분배투명성 제고를 위해 분배현장 방문장소를 20곳으로 확대하기로 합의하였다. 남북한은 전체회의와 3차례의 위원장 접촉, 5차례의 위원접촉을 거쳐 12개항으로 된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 제10차 회의 합의문」을 채택하고 회담일정을 종료하였다.

합의문 요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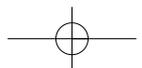
1. 쌍방이 가지고 있는 경제요소를 결합, 새로운 방식의 경제협력사업 추진
 - 남측은 '06년부터 의복류·신발·비누 등을 생산하는데 필요한 원자재를 북측에 제공, 북측은 아연·마그네사이트 등 지하자원 개발에 대한 투자를 남측에 보장하고 생산물을 제공
 - 남북은 앞으로 경제협력사업 대상을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방안 연구·검토
 - 이와 관련 경제 실무적으로 제기되는 문제를 협의하기 위해 8월 중 평양에서 실무자간 협의 진행
2. 9월중 개성공단내 남북경제협력협회사무소 개설, 「남북경제협력협회사무소 개설 및 운영에 관한 합의서」 채택
 - 협회사무소 개설을 위한 공동준비단을 9월초부터 구성, 개성공단으로 파견하여 실무적 문제처리
3. 남북은 개성공단 1단계 100만평 구역 기반시설을 조속히 건설, 전력·통신·용수 등을 원만히 보장, 15개 시범공장 건설을 금년내 완료, 공업지구 건설이 빠른 속도로 진척될 수 있도록 통행절차 개선, 본단지 분양 등에 적극 협력
4. 국장급을 대표로 하는 3~4명 규모의 남북수산업협력실무협의회 구성, 서해상 평화정착과 남북어민의 공동이익을 보장하는 방향에서 공동어로·양식·수산물 가공 등 어업협력 문제들을 협의·해결
 - 이와 관련, 남북수산업협력실무협의회 제1차 회의를 7.25~27 개성에서 진행
5. 경의선·동해선 철도연결 공사를 빨리 끝내고, 군사적 보장조치를 조속히 마련하는데 따라 올해안 철도 개통식 진행
 - 8월중 철도연결구간 공사실태 공동점검, 10월경 열차시험운행과 도로개통식 실시
 - 5차 남북철도·도로연결실무협의회를 7.28~30 개성에서 개최
6. 북측 민간선박의 제주해협 통과를 오는 8.15 계기로 실현, 실무적 문제들은 제5차 해운협력실무접촉을 8.8~10 문산에서 개최하여 협의



- 7. 빠른 시일내 임진강 수해방지 단독조사 상호교환, 군사적 보장조치가 조속히 마련되는 데 따라 8월 하순경 공동조사 진행
 - 당면한 올해 홍수철 피해대책을 위해 북측은 임진강과 임남댐의 방류계획을 남측에 통보
- 8. 「개성공업지구와 금강산관광지구의 출입 및 체류에 관한 합의서」등 경제협력을 제도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9개 합의서를 필요한 절차를 거쳐 8월 초까지 발효
- 9. 남북은 쌍방의 경제시찰단을 경제협력대상들이 협의되는데 따라 11월중 상호교환
- 10. 과학기술협력을 적극 추진하기 위해 남북과학기술실무협의회를 구성·운영하는 문제를 문서교환 방식으로 협의
- 11. 동포애와 인도주의적 견지에서 북측에 쌀 50만톤을 차관방식으로 제공
- 12.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 제11차 회의는 9.28~10.1 평양에서 개최
 - 제2차 개성공단건설실무접촉, 제1차 임진강수해방지실무접촉, 제2차 경제협력제도실무접촉, 제2차 원산지확인실무접촉은 9~10월 중 개성에서 진행, 구체적 일정은 문서교환방식으로 정함.

나.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 제11차 회의 및 위원급 준비접촉 | 제10차 회의에서 남북은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 제11차 회의를 2005년 9월 28일부터 10월 1일까지 평양에서 개최하기로 합의하였다. 그런데 북한이 9월 21일 전화통지문을 통해 남북경제협력협회사무소 개소식과 동시에 진행하는 것이 의의가 있다는 점을 들어 10월 하순경 개성에서 진행하자고 제의하여 회의 개최 일정이 조정되었다.

이어서 북한은 10월 6일 전화통지문을 통해 제11차 회의에 앞서 토의의제를 교환하고, 토의의제 협의를 위한 위원급 준비접촉을 개성에



서 개최하자고 제의하였다. 우리 정부는 한정된 협상기간 내에 다양하고 많은 의제를 소화해 내야 하는 제약에서 벗어나 상호 예측가능하고 실질적인 토의의 진행을 위한 여건을 마련하기 위하여 사전 토의의제 교환과 위원급 준비접촉을 수용하였다. 이는 회의의 원활한 진행과 실질협의 중심의 회담문화를 정착시켜 나간다는 정부노력의 일환이라 할 수 있다.

이에 따라 남북 쌍방은 10월 17일 제11차 회의 토의의제를 교환하고, 2차례의 위원급 준비접촉(1차 : 10. 20~21, 2차 : 10. 25~26, 개성 자남산 여관)을 거쳐, 10월 28일 개성공단 내에 설치된 남북경제협력협사무소에서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 제11차 본회의를 개최하였다.

쌍방 위원 명단

① 위원급 준비접촉

| 구 분 | 남 한 | 북 한 |
|-----|-----------------------------------|---|
| 대 표 | 박홍렬(통일부 상근회담대표) 오광세(국무총리실 심의관) | 조현주(민족경제협력위원회 실장) 방강수(민족경제협력위원회 책임참사) 김동철(내각사무국 부원) |

② 본회의

| 구 분 | 남 한 | 북 한 |
|-----|--|---|
| 위원장 | 박병원(재정경제부 차관) | 최영건(건설건재공업성 부상) |
| 대 표 | 박홍렬(통일부 상근회담대표) 신동식(산자부 무역정책심의관) 전병성(건설교통부 수자원기획관) 배국환(기획예산처 재정정책기획관) 오광세(국무총리실 심의관) | 조현주(민족경제협력위원회 실장) 방강수(민족경제협력위원회 책임참사) 김춘근(민족경제협력위원회 서기장) 주동찬(중앙특구 개발지도 총국장) 박정성(철도성 대외철도협력국장) |

(1) 토의의제 사전 교환

쌍방은 합의한 대로 10월 17일 관문점을 통해 「경추위」 제11차 회의에서 토의할 의제를 문서로 교환하였다.

우리측은 철도·도로 등 기존 합의 협력사업의 이행문제, 협의되었거나 새롭게 제기하는 문제, 위원회 및 실무접촉 개최문제 등 총 17개 협의 의제를 제시하였으며, 북한측은 경공업 협력, 지하자원 투자 문제 등 총 4개의 협의 의제를 제시하였다.

(2) 제1차 위원급 준비접촉

우리 정부는 10월 17일 북한측에 전달한 토의의제에 대한 취지, 이행방안 등을 자세히 설명하고 특히 기 합의사항 중 군사적 보장조치가 필요한 철도시험운행·도로개통식 개최와 수산협력, 임진강 수해 방지, 개성공단개발사업 관련 통행·통관 절차 간소화 등의 이행을 강력히 촉구하는 한편 경추위 산하 실무접촉의 일정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다.

북한은 경추위 제10차 회의에서 합의한 경공업 원자재 제공 관련 지원을 거듭 요청하면서 우리측이 제기한 철도·도로 등 기 진행중인 사업은 이미 논의되어왔던 사안인 만큼 실천만 하면 되는 문제로 향후 협의해 나가면 될 것이라는 소극적인 태도를 견지하였다. 이에 대해 우리측은 남북간 합의 사항은 지켜져야 한다는 입장을 재차 강조하고, 경공업 원자재 제공 문제와 관련하여 규모와 대가상환 방식의 협력 형태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여 북한측의 이해를 도모하였다.

쌍방은 자기측 입장을 충분히 설명한 만큼 좀더 진전된 입장을 가지고 10월 25일부터 10월 26일까지 제2차 위원급 접촉을 진행하기로 합의하고 제1차 위원급 준비접촉을 종료하였다.

(3) 제2차 위원급 준비접촉

우리 정부는 제1차 위원급 준비접촉에서 표명한 기본 입장을 견지 하면서 제2차 준비접촉에 임하였다. 특히 북한이 지원을 거듭 요청한 경공업 원자재 제공 문제 관련 제공 가능 규모를 북한측에 전달하고, 「남북 경공업 원자재 제공 및 대가상환에 관한 합의서」를 제시하면서 대가상환 방식의 협력형태임을 재차 강조하였다. 또한 지하자원개발 협력 문제는 우선 관련 정보 파악과 전문가 및 기업인이 현장을 실사 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점을 설명하고, 북한의 협조를 요청하였다. 이와 함께 철도·도로연결 사업과 수산협력, 임진강 수해방지, 개성공단건설 사업 등은 군사적 보장조치와 연관되어 있는 만큼 조속한 시일 내에 남북 군사당국간 회담을 개최해야 한다는 점을 적극 촉구하였다.

북한은 제2차 위원급 준비접촉에서도 경공업 원자재 제공 문제 협의에 보다 많은 관심을 가졌다. 또한 군사적 보장조치와 관련하여서는 경추위 소관 사항은 아니라고 하면서도 관계 기관에 건의하여 군사회담이 좋은 방향으로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표명하였다.

쌍방은 2차례에 걸친 위원급 준비접촉을 통해 자기측 입장을 충분히 설명하였고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 제11차 회의 본회의 개최가 얼마 남지 않은 점 등을 감안하여 제11차 회의는 합의문 보다는 향후 협의해 나가야 할 사안이 많은 만큼 계속 협의해 나가자는 차원에서 공동보도문 형식으로 발표하자는데 대해 공감대를 형성하였다.

(4)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 제11차 회의 본회의

2005년 10월 28일 개성공단내 남북경제협력협회사무소 개소식에 이어 경협협의 사무소 2층 회담장에서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 제11차 회의 본회의가 개최되었다. 제11차 회의 본회의는 위원장 접촉을

먼저 하고 전체회의를 개최하여 2차례 위원급 준비접촉에서 합의한 대로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 제11차 공동보도문을 발표하는 형식으로 진행되었다.

우리측은 위원장 접촉을 통해 앞서 위원급 준비접촉에서 이미 제기했던 경협사업 및 주요현안에 대한 입장을 다시 한번 명확히 전달하였다. 구체적으로는 열차시험운행·도로개통식과 임진강 수해방지, 개성공단 건설 등의 사안이 조속히 이행될 수 있도록 촉구하고, 이러한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군사적 보장 장치가 조속히 마련되어야 한다는 점을 재차 강조하였다.

이와 함께 경공업 및 지하자원개발 협력은 상호 보완적 협력이며 경공업 원자재 제공에 따르는 대가가 수반되어야 한다는 점을 주지시키는 한편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의 운영방향 및 남북경제협력의 향후 추진방향을 설명하였다. 또한 금강산 관광을 둘러싼 현대와 아태간의 갈등에 대해 남북 사업자간 합의가 준수되고, 남북관계에도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해결되어야 한다는 점을 설명하면서 당국차원에서 적극 협조하고 지원해야 할 것임을 강조하였다. 한편 조류 인플루엔자 관련 남북간 협력의 필요성도 전달하였다.

이에 대해 북한은 우리측 입장을 경청하는 한편 경공업 및 지하자원 개발 협력 문제가 원활히 추진되기를 기대하며, 앞으로 현안 위주로 필요하다면 위원장 접촉 또는 위원급 접촉 등을 개최하자고 하였다. 쌍방은 위원장 접촉에 이어 전체회의를 개최하여 철도·도로연결, 수산협력, 개성공단 건설, 임진강 수해방지, 경공업 원자재 제공과 지하자원 개발협력사업에 대해 계속 협의해 나가기로 한다는 요지의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 제11차 회의 공동보도문을 발표함으로써 공식적인 일정을 종료하였다.

다.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 위원급 실무접촉 | 북한은 11월 10일 전

화통지문을 통해 경공업 및 지하자원 개발협력, 철도·도로 연결 등 남북경제협력과 관련한 주요 현안문제들을 협의하기 위해 11월 하순경 합의되는 날짜에 남북경제협력협회사무소에서 경추위 위원급 실무접촉을 개최하자고 제의해 왔다.

우리 정부는 제11차 회의 공동보도문 정신에 따라 북한의 제의를 수용하는 한편 철도·도로 연결, 수산협력, 개성공단 건설, 임진강 수해방지사업과 경공업 및 지하자원 협력문제를 구체적인 협의의제로 통보하였다. 이에 따라 2005년 11월 23일부터 24일까지 개성 남북경제협력협회사무소에서 경추위 위원급 실무접촉이 개최되었다.

쌍방 대표단 명단

| 구분 | 남한 | 북한 |
|----|-----------------------------------|---|
| 대표 | 박홍렬(통일부 상근회담대표) 오광세(국무총리실 심의관) | 조현주(민족경제협력위원회 실장) 리영호(민족경제협력위원회 참사) 김동철(내각사무국 부원) |

우리측은 전화통지문을 통해 밝힌 대로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 제11차 회의 연장선상에서 기 합의사항 중 군사적 보장조치가 필요한 열차시험운행·도로개통식과 수산협력, 임진강 수해방지, 개성공단개발사업의 이행을 강력히 촉구하면서 북한의 호응을 적극 유도하였다.

북한은 경공업 원자재 제공 관련 문제의 논의에 역점을 두면서 철도·도로 등 진행중인 사업은 이미 논의되어왔던 사안으로 군사적 보장조치만 충족되면 잘 해결될 것이라는 소극적인 태도를 보였다. 이에 대해 우리측은 남북간 합의 사항은 반드시 이행되어야 한다는 점을 다시 한번 명확히 강조하는 한편, 경공업 원자재 제공 규모와 협력 방식에 대해서는 제11차 회의 위원급 준비접촉과 위원장 접촉을 통해

제시한 입장을 일관되게 견지하였다.

한편 북한측은 남북경제협력협회사무소가 민간차원의 경제협력사업을 효율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향후 방북 초청장과 원산지 확인서 등은 기본적으로는 협회사무소를 통해 전달할 것이라고 하면서 경추위와 경제분야 실무회담은 가급적 협회사무소에서 개최하고자 제의하였다. 이에 대해 우리측은 북한측이 제기한 민간차원의 경제협력사업 지원과 당국간 경제분야 회담 장소 제공 등은 남북경제협력협회사무소 설립취지에 부합되는 만큼 원칙적으로 동의한다고 대응하였다.

쌍방은 이들간 당국간 경제협력관련 주요현안 문제에 대해 입장을 충분히 설명하고 협의하였으나 구체적인 합의를 도출하지 못하여 상호 확인된 입장을 바탕으로 연구·검토하여 계속 협의해 나가기로 하고 경추위 위원급 실무접촉을 종료하였다.

2. 남북농업협력위원회 제1차 회의 남북농업협력위원회 제1차 회의는 2005년 8월 18일부터 19일까지 개성에서 개최 되었다.

쌍방 위원 명단

| 구분 | 남한 | 북한 |
|-----|-------------------|---------------------|
| 위원장 | 이명수(농림부 차관) | 문용조(농업성 부상) |
| 위원 | 박홍렬(통일부 상근회담대표) | 방강수(민족경제협력위원회 책임참사) |
| | 장태평(농림부 농업구조정책국장) | 량기건(민족경제협력위원회 부국장) |
| | 정광수(산림청 산림자원국장) | 류상봉(농업과학원 부원장) |
| | 김성대(국무총리실 심의관) | |

우리 정부는 남북간 농업협력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농업협력의 목표와 기본방향에 대한 상호 공감대 형성이 매우 중

요함을 강조하면서 주요 협력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추진계획과 방안 등을 제시하였다. 아울러 남북 당국간 시범사업을 통해 농업협력사업의 성공적인 모델을 창출해 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함을 강조하고 공동영농단지 조성, 산림녹화 협력사업, 농업 전문인력 및 기술교류, 남북 상호보완적 협력사업 공동연구 등의 협력사업의 당위성을 주장하였다.

이에 대해 북한측은 이 회담이 농업분야에서 당국간 처음 진행되는 회담인 만큼 우선 농업협력사업 발전을 위한 기본적 내용부터 협의·확정하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종자 생산·가공·보관시설 현대화 및 육묘 공업화, 비료·농약·농기계 등 물자 및 시설 제공, 축산·과수·잠업 등 분야에서의 협력 등을 주장하였다.

특히 우리 정부가 남북공동 협력사업으로 제기한 남북공동영농단지 조성·운영 방안이 양측간 핵심 이슈로 부각된 가운데 북한은 동사안에 대해 다소 회의적인 반응으로 일관하였다. 우리측은 북한이 독립조항으로 요구한 ‘현대적인 종자생산 및 가공·처리·보관시설을 지원’ 하는 것을 수용하되 ‘일정한 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시범적 협동농장 조성·운영’ 과 ‘우리측의 전문가들과 기술자들이 필요한 시기에 해당지역을 방문할 것’ 을 보장할 것을 촉구하였다.

이들간 진행된 회담에서 쌍방은 전체회의 2회를 비롯, 위원장 접촉 2회 및 위원접촉 4회 등 총 8차례 회의를 통해 의견을 조율한 끝에 시범적 협동농장 운영, 농업과학기술 분야에서의 협력, 양묘장 조성 및 산림병해충 방제 등 7개항에 합의하고 이를 「남북농업협력위원회 제1차 회의 합의문」으로 채택하였다.

남북농업협력위원회 제1차 회의는 북한의 농업생산성 향상 및 개발지원에 역점을 두고 당국 차원의 협력방안이 진지하게 논의 되었으며, 특히 남북 당국간 농업협력 논의의 장이 최초로 마련되었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었다. 특히 이 회담을 통해 그동안 북한에 대한 일

방적·단순구호성 위주의 지원에서 벗어나 북한의 자생적 농업기반 조성단계로 본격 돌입하는 계기는 물론 북한의 농업생산성 제고 및 식량난 해소에 기여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합의문 요지

1. 일정한 지역의 협동농장을 선정, 아래와 같은 방식으로 협력사업을 진행하고 그 성과에 따라 확대해 나가기로 함.
 - 남측은 육묘시설, 비료, 농약, 농기계 등 농기자재, 배합사료 및 영농 기술 등을 2006년부터 지원
 - 이를 위해 북측은 남측 전문가와 기술자의 필요한 시기 해당 지역 방문을 보장
2. 현대적인 종자생산 및 가공·처리·보관시설을 2006년부터 지원하는데 적극 협력
3. 우량한 유전자원의 교환과 육종 및 재배기술, 생물농약의 개발과 생산 기술, 농작물 생육예보 및 종합적 병해충 관리체계(IPM)형성, 남측 농업 전문가들의 방문 등 농업과학기술분야에서 협력
4. 축산, 과수, 채소, 잡업, 특용작물 등의 분야에서 협력사업을 발전시켜 나감.
5. 토지 및 생태환경보호를 위한 양묘장 조성과 산림병해충방제 등 산림 자원을 늘려 나가는데 서로 협력
 - 북측의 동·서부지역에 각각 1개씩의 양묘장을 조성, 구체적인 장소는 향후 결정
6. 상기 명시된 사업들의 체계적 추진 및 실무적 협의를 위해 필요한 시기 마다 각각의 실무접촉 개최
7. 남북농업협력위원회 제2차 회의를 향후 문서교환 방식을 통해 날짜와 장소를 협의 확정하기로 함.

남북한은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 제10차 회의 합의에 따라 남북수산협력실무협의회 제1차 회의를 2005년 7월 25일부터 27일까지 출퇴근 방식으로 개성에서 진행하였다.

쌍방 대표단 명단

| 구분 | 남한 | 북한 |
|------|------------------------------|---------------------------------|
| 수석대표 | 심호진(해양수산부 어업자원국장) | 조현주(민족경제협력위원회 실장) |
| 대표 | 이재호(통일부 과장) 박규호(해양수산부 과장) | 정용호(수산성 국장) 김명찬(국토환경보호성 부국장) |

남북 쌍방은 회담에서 수산협력을 통해 서해상 긴장완화와 평화를 촉진하는 계기를 마련하고 남북 어민들의 이익 보호와 수산분야 기술 교류 등을 위해 남북공동어로수역 설정, 제3국어선의 불법조업 근절 문제, 수산분야 기술교류 등을 중심으로 협의를 하였다. 공동어로수역에 대해 우리측은 군사당국간에 합의가 될 것이며 대상 어장도 다

남북수산협력실무협의회
제1차 회의



양할 수 있기 때문에 합의서에 구체적인 어장을 명시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설명하였다. 이에 대해 북한측은 군사당국회담에서 빨리 합의를 해서 시행하기 위해서는 수산회담에서 기본적인 것을 정하는 것이 바람직한 만큼 구체적 어장의 명칭을 합의서에 명시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불법어로 활동방지와 관련하여 우리 정부는 최대의 당면과제가 서해평화정착이며 이를 위해서는 제3국어선의 위법조업 방지가 최우선과제임을 강조하였다. 이에 대해 북한은 불법조업을 막기 위해서는 남측은 남측대로, 북한은 북한대로 자기쪽에서 방지하면 되고, 그 틈새인 공동어로 구역에서만 차단 조치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면 될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우리 정부가 제기한 수산기술협력, 연구소간 기술교류, 수산자원 공동조사, 우량품종 공동연구 등은 남북이 우량품종을 공동개발하고 연구소간에 교류를 추진하는 것으로 의견이 접근되었다. 또한 우량품종의 개발, 수산분야 기술교류, 제3국 어장진출 협력 등에 대해서는 쌍방의 의견이 접근되었다.

결국 쌍방은 서해상의 공동어로 수역설정은 군사당국자회담에서 구체적인 수역을 결정하도록 하고 불법어로 활동방지에 대해서는 양측이 서해에서 불법어선들의 출입을 통제하는 조치에 협력하기로 하였다. 남북 쌍방은 전체회의 1회, 수석대표접촉 5회, 종결회의 1회 등 총 7차례의 접촉을 가진 후 서해상 평화정착 및 남북어민들의 공동이익 도모에 기여할 수 있는 6개항의「수산협력실무협의회 제1차 회의 합의서」에 가서명, 상호 교환함으로써 공식회담 일정을 모두 종료하였다.

합의서 요지

1. 서해에서 남북공동어로 수역 설정·이용
 - 공동어로 수역 및 시작 시기는 남북군사당국회담에서 합의되는데 따라 확정
 - 공동어로기간, 어선 수, 어구, 입어로 등은 쌍방이 합의 결정
2. 서해에서 불법어선들의 어로활동방지를 위해 출입을 통제하는 조치에 협력
3. 수산물 생산, 가공, 유통분야에서의 협력사업 진행, 이를 위한 구체적인 문제들은 남북수산협력실무접촉에서 협의
4. 수산물 생산향상을 위한 우량품종의 공동개발 추진, 이를 위한 수산분야 기술교류 추진
5. 제3국 어장진출에서 서로 협력
6. 남북수산협력실무접촉 날짜 및 장소는 문서교환방식으로 협의·확정

4. 남북철도·도로연결실무협의회 제5차 회의 남북한은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 제10차 회의 합의에 따라 남북철도·도로연결실무협의회 제5차 회의를 7월 28일부터 30일까지 출퇴근 방식으로 개성에서 개최하였다.

쌍방 대표단 명단

| 구분 | 남한 | 북한 |
|------|------------------------------|--------------------------------|
| 수석대표 | 구자명(건설교통부 남북교통과장) | 박정성(철도성 대외철도협력국장) |
| 대표 | 최영준(통일부 과장) 유복환(재정경제부 팀장) | 김용(광복총회사 총사장) 김창식(철도성 책임부원) |

남북 쌍방은 경의선·동해선 철도연결구간에서 공사를 빨리 끝내고 연내에 철도 개통식을 진행하기 위해 8월중 경의선·동해선 철도연결구간의 공사실태에 대한 공동점검 실시, 10월경 열차시험운행과

도로개통식을 남북 공동행사로 동시에 개최하는 문제 등에 대해 협의하였다.

우리측은 2000년 7월부터 추진된 남북철도·도로 연결공사가 연내에 완료되어 개통되기 위해서는 남북간에 합의한 대로 철도연결구간의 공사실태에 대한 공동점검이 실시되어야 하고, 철도·도로 운영을 위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함을 강조하였다. 북한은 철도연결공사에 추가되는 자재장비와 역 주변 정리 및 인입도로 포장에 필요한 자재장비를 협의하여 확정하자고 제의하였다. 또한, 경의선·동해선 철도종업원 살림집 건설과 철길 안전그물망 설치를 요구하고, 철도연결구간의 북한 구역 철도전철화공사대상 협의·확정 및 이에 대한 설계와 설비, 자재보장대책을 세울 것을 제의하였다.

특히 쟁점이 됐던 문제는 북한이 요구한 추가 자재제공, 철도종업원 살림집 및 역사 부대시설·설비, 자재제공, 북한 지역 철도연결구간의 전철화 공사 등에 대한 보장과 관련된 문제였다. 우리측은 북한 지역 철도연결구간 전철화 문제에 대해 전철화가 되지 않아도 철도를 개통하는 데는 문제가 없다는 것을 이미 북한측에 충분히 인식시켰고, 또한 철도종업원 살림집 건설, 철도연변 가설울타리, 역 진입도로 포장 등은 남북철도 연결사업과 직접적인 연관성이 없는 부분으로 이에 대한 지원은 어렵다는 입장을 전달하였다. 다만, 철도연결사업과 직접 연관성이 있는 부분에 한하여 추가 자재·장비 제공은 보다 구체적으로 산출근거를 제시하면 협의하여 지원여부를 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을 전달하였다.

남북쌍방은 전체회의, 수석대표접촉 등 총 13차례의 접촉을 통해 상호 입장을 조율하고 총 6개항에 이르는 「남북철도·도로연결실무협의회 제5차 회의 합의서」에 가서명, 상호 교환함으로써 공식회담일정을 종료하였다.

합의서 요지

1. 경의선 및 동해선 철도연결구간 공사를 빠른 시일내에 끝내기로 하며, 남측은 역사 건축에 필요한 추가 자재·장비들을 제공
2. 철도연결구간에 대한 공동점검을 경의선은 8월 18일부터 20일까지 동해선은 8월 23일부터 25일까지 진행하며, 절차와 방법은 본 합의서 부록에 따름.
3. 경의선 및 동해선의 열차시험운행과 도로개통식을 군사적보장조치가 취해지는데 따라 남북 공동행사로 10월 하순경 동시에 개최하기로 하며, 이와 관련한 실무적 조치들은 계속 협의
4. 철도운영공동위원회와 도로운영공동위원회를 구성하기 위해 남북위원 명단을 빠른 시일내에 문서로 교환
5. 철도연결공사 진행과 관련하여 기술지원이 원만히 진행되도록 적극 협력
6. 필요한 시기마다 개성 또는 금강산에서 수석대표 또는 대표 접촉을 가지며, 제11차 남북철도·도로연결실무접촉은 개성에서 진행하고, 구체적인 일정은 문서교환 방식으로 협의

5. 남북해운협력실무접촉 및 남북해운협력협의회

가. 제5차 남북해운협력실무접촉 | 당초 제5차 해운협력실무접촉은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 제9차 회의 합의에 따라 2004년 7월 13일부터 15일까지 속초에서 개최될 예정이었으나 북한이 2004년 7월 9일 전화통지문을 통해 예정대로 개최할 수 없음을 통보해 옴에 따라 접촉이 연기되었다. 2005년 회담이 재개된 이후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 제10차 회의에서 합의한 대로 제5차 해운협력실무접촉이 2005년 8월 8일부터 10일까지 문산에서 개최되었다.

쌍방 대표단 명단

| 구분 | 남한 | 북한 |
|------|------------------------------|--------------|
| 수석대표 | 이재균(해양수산부 해운물류국장) | 차선모(육해운성 국장) |
| 대표 | 윤미량(통일부 과장) 김병호(국무총리실 과장) | 한명철 |

쌍방은 장거리 직접통신 보장, 해사당국간 유선통신망 연결, 제주 해협통과 항로대 설정 및 해사협의기구 명칭에 대해 서로 입장을 주고 받았다.

우리측은 통신문제와 관련해서 해사당국간 유선통신망을 8월 25일 까지 연결하여 8월 29일부터 운용하고 북한 항만에서의 장거리 직접 통신도 8월 29일부터 보장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이에 대해 북한은 해사당국간 유선통신망은 8월 15일 제주해협 통과를 신청·허가 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8월 11일에 연결하여 12일부터 본격적으로 운용하고, 장거리 직접통신은 북한이 보장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만큼 이번 회담에서는 논의하지 말자고 주장하였다. 해사당국간 유선통신망은 북한측의 주장을 우리측이 그대로 수용하기로 합의하였고, 장거리 직접통신은 연내에 보장하겠다는 선에서 최종합의를 이루었다.

우리측은 제주해협 통과 항로대 설정을 위한 해운 부속합의서의 수정·보충합의서를 채택하자고 제의하였고 북한은 제주해협 통과는 이미 제15차 장관급회담과 경제협력추진위원회 제10차 회의에서 합의한 사안인 만큼 수정·보충합의서 없이 항로대를 설정하는 문제만 실무적으로 처리하면 된다고 주장하였다. 제주해협 통과 항로대는 해당 수역이 우리 해역인 만큼 우리 정부 안으로 설정하여 이를 반영한 「남북해운합의서 이행과 준수를 위한 부속합의서의 수정·보충합의서」를 채택하였고, 해사협의기구 명칭에 대해서는 서로 의견을 조정하여 남북해운협력협의회로 결정하였다.

쌍방은 전체회의 이후 각 3차례의 수석대표접촉 및 대표접촉을 통

해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 몇 차례의 공동보도문(안)을 교환하며 논의를 거듭하여 6개항의 합의 사항을 담은 공동보도문을 도출하였다. 또한 남북은 제주해협통과 관련 항로대 설정을 위한 부속합의서 수정·보충합의서를 채택하고, 쌍방 장관급회담 수석대표의 서명 절차는 문서교환방식으로 진행하기로 하였다. 이와 함께 남북해운합의서 및 부속합의서의 발효('05년 8월 1일)에 따라 남북해사당국간 협의기구인 남북해운협력협의회를 구성·운영하기로 하고 제1차 회의 개최일자는 추후 문서 교환방식으로 정하기로 하고 회담을 종료하였다.

공동보도문 요지

1. 북측 민간선박의 제주해협 통과를 8.15 부터 개시
- 이를 보장하기 위하여 부속합의서 수정·보충 합의서를 채택
2. 남북해운합의서 제4조 제2항에 지정된 자기측 항구간을 직접 항행하는 도중에 상대측 해역을 통과하는 항로의 이용을 8.15부터 개시
3. 남북해사당국간 유선통신연결
- 2회선(전화 1회선, 모사전송 1회선)을 판문점 선로를 통하여 8.11 연결, 8.12부터 운용 개시
4. 정박중 선박에 설치된 통신설비를 이용한 장거리 직접통신을 금년중에 보장하도록 노력
5. 안정적인 선박운항을 위한 절차 및 방법과 관련한 자료교환 실시
- 문서교환 방식
6. 해운합의서 발효에 따른 남북 해사당국간 협의기구의 명칭을 「남북해운협력협의회」로 명명
- 제1차 회의 날짜와 장소는 추후 문서교환 방식으로 결정

나. 남북해운협력협의회 제1차 회의 | 남북 해사당국간 협의기구인 남북해운협력협의회 제1차 회의는 2005년 9월 29일부터 30일까지 개성에서 개최되었다.

쌍방 대표단 명단

| 구분 | 남한 | 북한 |
|------|-------------------|--------------|
| 수석대표 | 이재균(해양수산부 해운물류국장) | 차선모(육해운성 국장) |
| 대표 | 윤미량(통일부 과장) | 한명철 |
| | 김병호(국무총리실 과장) | 정금철 |
| | 윤관용(해양경찰청 과장) | 최일선 허영준 |

쌍방은 북한 선박의 제주해협 통과 등 그 동안 남북해운협력의 성과를 평가하고 새로이 출범한 남북해운협력협의회의 운영 방향에 대해서 논의하였다. 또한 남북해운협력협의회라는 새로운 명칭하에 첫 회의를 개최한 만큼 남북해운항만 관계자 상호 교환 방문, 남북 해난 구조기관간 직통 연락망 구축 등 새로운 협력사업에 대한 논의를 시작하였다.

남북은 해사당국간 유선통신망 운영합의서에 대해서는 큰 이견없이 원칙적인 합의를 이루었다. 우리 정부는 해운항만 관계자 상호 교환 방문, 해난구조 기관간 직통 연락망 구축 등의 새로운 의제와 함께 장거리 직접통신의 조속한 보장 문제를 제기하였다. 북한은 새로운 의제들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을 표시하며 계속 논의해나가는 입장을 보였다. 그러나 북한 항만에서 장거리 직접통신의 조속한 보장을 다시 요구한 것에 대해서는 제5차 해운협력실무접촉에서 연내 보장을 약속한 만큼 내부적으로 노력하고 있으니 더 이상 논의하지 말자는 입장을 보였다.

또한 최근 남한 선박이 북한 해역에서 호출시 응답의무를 어기는

등 해운합의서 및 부속합의서 위반 사례를 지적하면서 합의서의 철저한 이행 등의 문제를 제기하였다. 북한이 제기한 합의서 이행에 대한 문제는 우리 정부가 일단 사실관계를 확인한 후 부적절한 합의서 위반 사례가 있을시 그런 사태가 재발되지 않도록 조치를 하겠다는 선에서 마무리하였다.

남북은 남북해운협력협의회 제1차 회의를 통해 향후 남북해운협력을 위해 노력하기로 한다는데 원칙적으로 합의하였고 남북해사당국 간 유선통신망 운영에 관한 합의서는 추후 문서교환 방식으로 서명·발효절차를 진행하기로 하고 공동보도문 없이 회의를 종료하였다.

6. 제1차 경공업 및 지하자원개발 실무협의 남과 북은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 제10차 회의 합의에 따라 제1차 경공업 및 지하자원개발 실무협의를 2005년 8월 24일부터 27일까지 평양에서 진행하였다.

쌍방 대표단 명단

| 구 분 | 남 한 | 북 한 |
|-------|------------------|-------------------|
| 단장 | 김영탁(통일부 교류협력심의관) | 리영호(민족경제협력위원회 참사) |
| 대 표 | 문대근(통일부 과장) | 김병오(경공업성 국장) |
| | 김경중(산업자원부 과장) | 한명철(민화협 부원) |
| | 박규식(통일부 과장) | 리광후(신발연합소 사장) |
| 지하 자원 | 이재호(통일부 과장) | 허성일(경공업성 일용품국장) |
| | 윤상흠(산업자원부 팀장) | 진 철(국가계획위 국장) |
| | | 정금철(내각사무국 책임부원) |

남북 쌍방은 전체회의, 단장접촉, 신발·섬유·비누·지하자원개발 등 부문별 토의 등 총 15차례의 접촉 갖고 경공업 생산공장 5곳을 방문하였다.

제1차 협의에서는 경공업 원자재 제공과 관련하여 원자재 품목, 용도, 규격, 생산공장의 공정, 설비, 생산능력 등을 확인하는 문제와 지하자원개발 협력문제를 중심으로 협의를 진행하였다. 그러나 경공업 원자재 제공 규모와 지하자원개발 협력 등 주요 쟁점사항에 대한 쌍방 입장 차이를 좁히지 못하고 합의문이나 공동보도문의 채택 없이 회의를 종료하였다. 동 회담은 남북이 보유하고 있는 자원과 자본·기술을 동원, 결합시킴으로써 민족의 공동이익을 추구하고 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새로운 남북협력의 장을 마련하는 계기가 되었다.

제7절 인도·사회문화분야 회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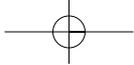
2005년 인도·사회문화분야의 회담은 4월 조류인플루엔자 실무접촉을 비롯, 제6차 남북적십자회담, 이산가족 화상상봉 관련 실무접촉 3회, 북한조류인플루엔자 관련 실무접촉 1회, 안중근의사 유해공동발굴 및 봉환을 위한 실무접촉 2회, 8·15 남북통일축구경기 실무접촉 1회, 국제경기대회 단일팀 구성을 위한 남북체육회담 1회 등 총 10회의 분야별 회담이 개최되었다.

인도분야에서는 면회소 착공, 화상상봉 등 이산가족 문제해결을 다양화하고 국군포로·납북자 문제도 본격 제기되었다. 사회문화분야에서도 북관대첩비 반환, 8·15 통일축구경기 개최 등 사회문화분야의 교류와 협력을 확대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우리 정부는 제15차 장관급회담에서 합의한 **1. 제6차 남북적십자회담** 대로 2005년 8월 3일 북한에 전화통지문을 보내 제6차 남북적십자회담을 8월 31일부터 9월 2일까지 금강산에서 적십자 총재(위원장)급으로 개최할 것을 제의하였다. 북한은 8월 4일 회신 전화통지문에서 8월 23일부터 8월 25일까지 적십자 부위원장을 단장으로 하는 회담으로 수정제의해 왔고, 우리 정부가 이를 수용함에 따라 제6차 남북적십자회담이 열리게 되었다.

쌍방 대표단 명단

| 구분 | 남한 | 북한 |
|------|------------------------|------------------------|
| 수석대표 | 장석준(대한적십자사 사무총장) | 최성익(조선적십자회 중앙위원회 부위원장) |
| 대표 | 이종렬(대한적십자사 남북교류협력 위원장) | 황철(조선적십자회 중앙위원회 위원) |
| | 유종렬(대한적십자사 남북교류협력 위원) | 리호림(조선적십자회 중앙위원회 위원) |
| | 이교식(대한적십자사 남북교류협력 위원) | |



동 회담에서는 국군포로 및 납북자(전쟁시기 및 그 이후 생사를 알 수 없게 된 사람들)의 생사주소 확인과 이산가족 화상상봉의 지속 실시, 이산가족 서신교환 및 대면상봉의 정례화 등이 핵심 의제로 다루어졌다.

남북한 양측은 전쟁시기 행불자 생사·주소 확인 필요성에 대해 원칙적으로 공감하였으나 대상범위 및 실시방안에 대해서는 이견을 노정하였다. 우리 정부는 전쟁시기 뿐만 아니라 그 이후의 행불자도 대상자에 포함시키고 기존의 이산가족 문제와 별개로 추진할 것을 제의한 데 반해, 북한은 전쟁시기 행불자만으로 범위를 한정하고, 기존 이산가족 문제로 일반화할 것을 주장한 것이다.

이산가족 화상상봉 확대 실시에 대해서도 기본방향과 상봉방식 등에는 의견이 접근되었으나 구체적 상봉규모, 횟수 등에 대해서는 남북한이 차이를 보였다. 우리 정부는 9월중 시범적 화상상봉 후보자 중 미상봉자를 우선대상으로 한 후 10월중 매주 2회 각기 200가족씩 상봉하고 내년부터 점차 확대해 나가는 방식을 제의하였다. 그러나 북한은 8·15 시범화상상봉을 “전환적 국면을 열어놓은 일대사업”으로 평가하면서도 구체적인 실천에 있어서는 연내 화상상봉은 2차례에 걸쳐 각기 40가족씩만을 실시하자는 데 머물렀다. 이밖에도 우리 정부는 서신교환 및 이산가족 대면상봉의 정례화(매분기별 1회 실시) 등을 제의하였고, 북한은 화상전송설비를 이용한 새로운 서신교환을 추진할 것을 제의하기도 하였다.

쌍방은 몇 가지 쟁점을 제외한 많은 부분에서 의견접근을 하였으나 가장 핵심적인 의제인 국군포로·납북자 문제에 대한 입장 차이로 합의서를 도출하지 못한 채 간략한 공동보도문을 내는 것으로 제6차 적십자회담을 종료하였다.



2. 남북이산가족 화상상봉 실무접촉

가. 제1차 남북이산가족 화상상봉 실무접촉 | 2005년 6·15 남북공동행사에 우리 정부의 당국대표단장 겸 대통령 특사로 파견된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6월 17일 김정일 국방위원장과와의 면담에서 고령화된 이산가족들에게 더 많은 만남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이산가족들의 화상상봉 문제를 제기하였고, 김정일 위원장이 동의하였다. 이어 서울에서 개최된 제15차 장관급회담(6월 21일~24일)에서 남북한은 8. 15를 계기로 이산가족들의 화상상봉을 시범적으로 실시하기로 하고 이를 위한 실무접촉을 7월 10일경 개성에서 가지기로 합의하였다. 실무접촉일자와 관련하여, 북한은 7월 6일 전통문을 통하여 7월 12일과 13일에 개최할 것을 제의하였고, 우리 정부는 이에 동의함으로써 7월 12일과 13일에 개성에서 남북이산가족화상상봉 실무접촉이 개최되었다.

이에 앞서 남북한은 화상상봉 실시의 기본 조건인 기술적 문제를 토의하기 위하여 6월 29일과 7월 5일, 두 차례에 걸쳐 기술실무자 접촉을 진행하였다.

쌍방 대표단 명단

| 구 분 | 남 한 | 북 한 |
|------|--------------------------------------|--|
| 수석대표 | 정승훈(대한적십자사 실행위원) | 황 철(조선적십자회중앙위원회 위원) |
| 대 표 | 남영숙(대한적십자사 실행위원) 최영운(대한적십자사 실행위원) | 김영희(조선적십자회중앙위원회 위원) 강철호(조선 체신성 관계자) |

남북한은 이미 두 차례의 기술실무자 접촉을 거친 뒤라 화상상봉을 위한 기술적 절차 등에 대해서는 무난히 의견 접근을 보았다. 그러나 쌍방은 상봉규모, 상봉시간, 상봉방식 등의 문제에 대해서는 이견을 보였다. 화상상봉의 일정과 규모 등에 대해서는 여러 차례 접촉을 통해 의견접근을 이루었다. 그러나 우리측이 ‘가족 대 가족’ 상봉방식

을 주장한 반면 북한은 기존의 '상봉자 대 가족' 개념을 고수하였다. 또한 화상상봉의 지속실시 문제에 대해서도 입장 차이를 나타내 합의 를 도출하지 못하였다.

쌍방은 통해 문서교환 방식으로 계속 협의하기로 하고 실무접촉을 종결하였다. 실무접촉 이후 남북한은 7월 15일, 18일, 19일에 가족 대 가족 상봉방식, 상봉순서, 화상상봉의 지속실시 등의 문제에 대해 판문 점 문서교환방식을 통해 서로 의견을 조율하여 7월 19일 「남북이산가족 시범화상상봉에 관한 합의서」를 채택·서명하였다.

합의문 요지

1. 올해 8월 15일에 화상상봉을 시범적으로 실시
2. 시범화상상봉의 규모는 남과 북 각기 20명씩으로 하며, 1명의 상봉자가 상대측 가족 5명정도를 만남.
 - 상봉후보자는 각기 100명씩 정하고, 후보자 명단은 7월 18일, 회보서는 7월 27일, 최종명단은 8월 2일에 교환
3. 시범화상상봉은 당일 오전 8시부터 한번에 10가족씩 오전 20가족, 오후 20가족이 상봉하는 것을 기준으로 하며, 상봉순서는 최종명단 교환시 쌍방이 협의하여 정함.
4. 시범화상상봉의 원활한 진행과 기술적 보장을 위해 가족동의를 전제로 진행인원 1명이 상봉보조
5. 화상상봉의 시험과 행사보장을 위하여 서울과 평양의 화상상봉 장소에 서울-평양간 직통전화를 2대씩 설치 운영

6. 기술적 보장을 위한 일정

- 남측은 7월 18일 군사분계선에서 남북 광케이블을 연결
- 남과 북은 7월 20일전까지 각기 10가족이 동시에 상봉할 수 있는 화상상봉설비를 갖추고, 7월 25일전으로 서울-평양간 SDH 전송로 총연장시험 진행
- 남과 북은 남북 SDH 전송로가 확인된 후 서울-평양간 이더넷망(IP망) 연결시험을 7월 30일전으로 진행
- 남과 북은 8월 1일부터 8월 5일까지 단말기 연결시험을 진행
- 총연결시험이 완료된 후 남과 북은 8월 6일부터 8월 14일까지 화상 단말기 운용방법 완성

7. 제6차 적십자회담에서 화상상봉의 확대문제를 협의

나. 제2차 및 제3차 남북이산가족 화상상봉 실무접촉 | 8월 15일 이산가족들의 시범화상상봉이 성공적으로 실시됨에 따라 제16차 남북장관급회담(9.13~16, 평양)에서 남북한은 연내에 화상상봉을 두 차례 더 실시하는 데에 합의하였다. 이에 따라 우리 정부는 9월 21일 대한적십자사 총재 명의의 전통문을 통하여 10월 5일 개성에서 화상상봉 추진일정에 대한 실무접촉을 갖자고 제의하였고, 북한이 이에 동의함으로써 제2차 남북이산가족 화상상봉 실무접촉이 개최되었다.

쌍방 대표단 명단

| 구분 | 남한 | 북한 |
|------|----------------------|---------------------|
| 수석대표 | 정승훈(대한적십자사 실행위원) | 황철(조선적십자회중앙위원회 위원) |
| 대표 | 남영숙(대한적십자사 실행위원) | 김영희(조선적십자회중앙위원회 위원) |
| | 최영운(대한적십자사 실행위원) | 강철호(조선 체신성 관계자) |
| | 우영관(대한적십자사 실행위원) | 강철성(조선 컴퓨터 센터) |
| | * 3차 접촉시 남영수, 우영관 불참 | * 3차 접촉시 강철성 불참 |

(1) 제2차 실무접촉

당초 제6차 적십자회담(8.23~25, 금강산)에서 비록 합의는 안되었지만 상봉규모, '가족 대 가족' 상봉방식, 제2·3차 상봉 후보자의 규모와 교환방식 등 상당한 부분에서 의견이 접근되었다. 우리측은 화상상봉의 규모를 매회당 2일씩 실시하는 것으로 하여 남과 북이 하루 각기 20가족씩으로 하여 이틀간 총 40가족씩 상봉하며, 상봉방식은 가족 대 가족 상봉방식으로 하되 가족당 참가인원은 5명 내외로 하는 것으로 제의하였다. 이에 대해서는 남북 쌍방간 큰 이견이 없었다.

그러나 우리 정부가 제시한 제2·3차 화상상봉 후보자의 규모(총 300명)와 그 명단 교환방식(300명을 한꺼번에 교환)에 대해서 북한은 제16차 장관급회담의 합의에 따라 연내에 이산가족 상봉행사를 한 차례 더 해야 하는 부담이 있으므로 제6차 적십자회담에서 논의된 규모와 방법대로 화상상봉을 실시하기에는 무리라는 입장을 보였다. 이같은 입장에서 북한은 제2차 화상상봉 대상을 시범화상상봉 때 생사가 확인되었지만 상봉에 참가하지 못한 대상으로 할 것과, 제3차 화상상봉후보자는 쌍방 각기 100명씩으로 하자고 제의하였다.

한편, 우리 정부는 화상상봉한 가족들의 교류지속문제를 제기하면서 화상상봉을 하였거나 그 과정에서 생존이 확인된 이산가족들에 대해 화상상봉 설비를 이용한 서신교환을 시범적으로 실시할 것을 제의하였다. 그러나 북한은 서신교환은 복잡성을 조장하는 문제라고 부정적 입장을 보이면서 대신에 화상상봉을 한 가족들 중 현금을 보내고자 희망하는 가족들에 대해 판문점을 통해서 현금을 보낼 수 있도록 하자고 주장하였다.

남북한은 이날 3차례의 전체회의, 2차례의 수석대표접촉을 통해 의견조율을 하여 화상상봉일자, 상봉방식, 기술적 문제들에 대해 의견접근을 보았으나 후보자 규모, 경비보전 등의 문제에 대해 입장을 좁히지 못하여 10월 7일 다시 협의하기로 하고 이날 접촉을 종료하였다.

(2) 제3차 실무접촉

10월 7일 남북한은 2차례의 전체회의와 4차례의 수석대표접촉을 통해 2차 실무접촉에서 미진했던 부분들에 대해 의견을 조율하였다. 화상상봉의 후보자 규모문제에 관하여 우리측은 제2차 화상상봉의 후보자는 북한측 안대로 하되, 제3차 상봉자의 후보자 규모를 150명으로 조정할 것을 수정제의하였다. 북한측 안대로 100명으로 할 경우 실제로 화상상봉이 가능한 대상자가 부족해질 것을 우려한 제의였다. 북한은 이에 대해 부정적 반응을 보였지만 몇 차례의 실무접촉 끝에 120명으로 합의되었다.

또한 서신교환 문제와 관련 우리 정부는 화상상봉한 가족들의 지속교류를 위해 서신교환을 거듭 강조하였지만 북한은 이를 완강히 거부하고 대신에 화상상봉에 참여한 자를 대상으로 관리운영프로그램을 통한 사진교환을 하는 것으로 절충되었다. 화상상봉을 위한 경비 보전에 대해 우리 정부는 북한이 화상상봉 준비와 실시 및 설비를 운영하는데 소요되는 경비 일부를 지원하기로 하였다.

남북한은 양일간 전체회의 5회, 수석대표접촉을 6회, 기술실무접촉을 1회 진행하여 제1차 화상상봉은 11월 24일과 25일에, 제2차 화상상봉을 12월 8일부터 9일 사이에 실시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남북 이산가족 화상상봉 실시에 관한 합의서」를 채택·서명하였다.

합의서 요지

1. 올해 2회 추가 화상상봉 실시
- 1차 11.24~25, 2차 12.8~9 각각 양일간 실시
2. 매회 남북 각기 40가족(1일 남북 각기 20가족씩 상봉, 4일간 남북 총 160가족)
- 가족 대 가족 상봉 방식으로 가족당 2~5명씩 참여
3. 1차 화상상봉은 시범화상상봉시 생사확인자중 미상봉자 대상 실시
- 2차 화상상봉은 쌍방 각기 120명 후보자명단을 교환하여 선정
4. 1차 최종명단 교환은 11.16, 2차 상봉후보자명단은 10.21, 회보서는 11.14, 최종명단은 11.16 교환
5. 화상상봉 참가 대상자의 사진을 관리운영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교환
6. 상봉 시작일 7일전에 남북간 전송로 및 화상단말기 운용시험을 진행
7. 기타 화상상봉 진행에 따른 실무적 절차와 관리운영 방법에 따르는 기술적 보장 문제는 시범화상상봉시 전례 준용
8. 남측은 북측이 화상상봉 준비와 실시 및 설비를 운영하는데 소요되는 경비 일부를 지원

2005년 3월 15일 우리 정부는 북한 **3. 조류인플루엔자 남북실무접촉**에 전화통지문을 보내 당시 북한 언론에 조류인플루엔자에 관한 보도가 몇 차례 있었던 점에 유의하면서 2004년 가금육 반입 위생조건 제정시 쌍방 관계 당국이 양해한 점에 기초하여 북한 지역에서의 조류인플루엔자 발생여부 및 그와 관련된 상황에 대해 정보 제공을 요청하였다. 이에 대해 북한은 3월 17일 전

화 통지문을 통해 북한 지역에서의 조류인플루엔자 발생 사실을 일체 부정하고, 우리 정부에 대해 북한 조류인플루엔자 발생여부 문제를 가지고 불필요한 의혹을 가지거나 다른 억측을 하지 말 것을 요구하였다.

이후 평양시 하당 닭 공장을 비롯한 2~3개 닭 공장에서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하여 북한 전 지역으로 확산될 가능성이 확인됨에 따라 우리 정부는 2005년 3월 29일 북한 국가수의비상방역위원회 위원장 앞으로 전화통지문을 보내 북한 조류인플루엔자 퇴치를 위해 약품·장비·기술인원 등 제반사항에 대해 적극적인 지원과 협력을 할 의사가 있음을 재차 통보하였다. 이에 대해 북한은 4월 8일 국가수의방역위원회 명의의 전화통지문을 통해 북한 지역에서의 조류인플루엔자 발생 사실을 시인하고 조류인플루엔자 퇴치에 필요한 장비와 약품 등을 제공해 줄 것을 희망해 왔다.

우리 정부는 4월 9일 북한에 전화통지문을 통해 기술협의 없이도 제공 가능한 방역약품 및 장비는 긴급 제공할 수 있으나 격리실험실, 바이러스 유전자 장비세트 등은 기술협의 후 전달 할 수 있음을 통보하였다. 북한이 4월 11일 우리 정부에 전화통지문을 통해 관련 실무협의 개최를 요구해 오며 따라 쌍방은 2005년 4월 22일 북한 조류인플루엔자 실무접촉을 개성에서 개최하게 되었다.

쌍방 대표단 명단

| 구 분 | 남 한 | 북 한 |
|------|-----------------------|--|
| 수석대표 | 김창섭(농림부 가축방역과장) | 리경군(국가수의비상방역위원회 서기장) |
| 대 표 | 이재호(통일부 과장) | 권정혁(국가수의비상방역위원회 상무위원) |
| | 김재홍(국립수의과학검역원 질병연구부장) | 성기철(민족경제협력연합회 개선통회사 사장) 김동철(내각사무국 부원) |

남북한은 개성 자남산 여관에서 오전 1차례와 오후 4차례 등 총 다

섯 차례 접촉을 갖고 북한 조류인플루엔자 방역을 위한 지원 문제를 협의하였다. 우리측은 북한의 조류인플루엔자 발병 관련 바이러스 유형, 인체감염 여부 등 추가 정보를 요청하였고, 북한은 4월 8일자 우리 정부에 통보한 수준의 발생 경위 등을 언급하면서 인체 감염사례는 없다고 응답하였다. 또한 우리측이 2003년도 조류인플루엔자 방역 퇴치 경험 전수 및 효과적인 방역과 퇴치를 위해 전문가 현장 방문 및 기술지원 문제를 제기한데 대해서는 국제기구(WHO, FAO)에서 이미 현장을 방문하여 분리된 바이러스를 검사한 만큼 그 결과를 보면 된다고 소극적인 태도로 일관하였다.

쌍방간 이견이 컸던 분야는 북한에 제공할 품목으로 우리측은 북한의 요구 품목중 제공가능 품목과 별도 추가 제공 품목을 순차적으로 제시하고 검토의견을 충분히 설명하였다. 이에 대해 북한은 그들이 제시한 품목 확정에 최대한 목표를 두고 방역보다는 예방약 생산 시설 확보에 집착하는 태도를 보였다. 특히 북한은 예방약 제조시설 지원과 나머지 품목을 연계시키는 태도로 일관하면서 전문가 현장 답사도 거부함으로써 합의를 이루지 못하였다.

실무접촉 이후에도 쌍방은 몇차례 전화통지문을 통해 의견조율을 시도했으나 입장 차이를 좁히지 못했다. 우리 정부는 인도적 차원에서 북한 지역의 조류인플루엔자 퇴치를 위해 필요한 약품과 장비를 남포항을 통해 북한에 전달하였다.

4.8.15 남북통일축구경기 실무접촉 현대그룹 현정은 회장은 2005년 7월 16일 김정일 국방위원장 방북면담시 8.15를 계기로 남북 축구경기를 개최하자는 정동영 통일부장관의 제의를 김위원장에게 전달하였다. 남북축구경기 개최문제를 협의하기 위한 실무접촉은 7월 26일과 28일 개성에서 두차례 진행되었다.

쌍방 대표단 명단

| 구분 | 남한 | 북한 |
|------|------------------|-------------------------|
| 수석대표 | 조중연(대한축구협회 부회장) | 리히연(축구협회 서기장 대리) |
| 대표 | 김동대(대한축구협회 사무총장) | 김창규(민족화해협의회 참사) |
| | 임병철(통일부 과장) | 박일남(체육지도위원회 대외사업국 책임부원) |

경기의 명칭, 선수단의 명칭, 선수단 규모, 왕래경로, 선수단복, 입장 시 단일기 사용, 심판 등에 대해서는 북한의 입장을 최대한 수용한 데다 이미 남북간에 합의된 전례가 있었던 만큼 합의가 쉽게 이루어졌다. 그러나 남녀경기의 일자와 장소를 8·15 민족대축전의 개막식·폐막식 행사와 연계하여 정하는 문제와 통일축구경기의 향후 정례화 문제 등에 대해서는 쌍방의 의견차이를 좁히지 못하였다.

우리측은 남북통일축구경기의 정례화(매년 1회 개최) 필요성을 강조하고 북한의 호응을 촉구하였으나 북한은 이번 실무접촉이 8·15 통일축구경기의 실무적 절차를 정하기 위한 자리라며 논의를 이에 국한시킬 것을 주장하였다. 그리고, 우리측은 8·15민족대축전의 개막식(8월 14일) 행사와 남자경기를 연계하는 것은 가능하나, 폐막식(8월 16



남북통일축구경기

일)에는 행사장과 경기장이 달라지기 때문에 여자경기를 개최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입장이었으나 북한은 여자경기도 폐막식 당일에 치러져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했다.

7월 28일 개최된 2차 접촉에서도 북한이 8·15민족대축전 폐막식 당일 여자경기를 개최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함에 따라 우리 정부는 북한의 주장을 수용하여 합의서를 채택하고 접촉을 마무리 지었다. 이로써 2002년 남북통일축구경기 이후 3년만에 남북간의 친선 축구경기가 열리게 되었다.

5. 안중근의사 유해발굴 및 봉환을 위한 남북실무접촉 제15차 남북장관급회담 합의에 따라 안중근의사 유해발굴 및 봉환을 위한 실무접촉이 개성에서 2차례 진행되었다.

쌍방 대표단 명단

| 구 분 | 남 한 | 북 한 |
|------|-------------------------------------|-----------------------|
| 수석대표 | 최완근(국가보훈처 보훈선양국장) | 전종수(조국평화통일위원회 서기국 부장) |
| 대 표 | 임병철(통일부 과장) | 김창규(민족화해협의회 참사) |
| | 이창민(통일부 과장) * 2차접촉 : 김영란(통일부 과장) | 위강남(조선역사학회 연구원) |

가. 1차 실무접촉 | 회담에서 남북은 사업의 성격과 의의, 추진방향에 대해서는 비교적 쉽게 의견 접근을 하였으나, 전문가회의 개최 장소, 운영방식 등 일부사안에 대해 이견을 보였다. 우리측은 전문가회의의 개최 장소를 참석인원 규모, 편의성 등을 고려하여 서울로 제의하였으나 북한은 현지에서 발굴작업과 함께 하자는 의견을 내놓았다. 향후 사업의 추진순서에서도 우리측이 안중근의사 유해위치 확정을 위한 충분한 자료검토 및 의견수렴 과정을 중요하게 생각한 데 비해 북

한은 바로 공동발굴단을 발족하자는 입장을 내놓았다.

이에 따라 합의서 문안조정이 대체적 의견접근을 이루었으나 최종 합의에는 이르지 못한 가운데 일단 실무접촉이 종료되었다. 이후 남북 양측은 실무접촉에서의 공감대를 토대로 관문점 문서교환방식을 통해 이견을 조정, 9월 15일에 최종합의서에 서명하였다.

합의서 요지

1. 남과 북은 일제의 을사5조약 날조 100년, 안중근의사 순국 95년이 되는 올해에 안중근의사의 유해공동발굴 및 봉환사업을 적극 추진함.
2. 남과 북은 안중근의사 유해위치 관련자료 조사 및 확인사업에 적극 협력함.
3. 남과 북은 안중근의사의 유해위치를 확인하고 조속한 시일 내 현지에서 전문가회의를 통해 이를 확정하며, 각기 필요한 수의 인원으로 “안중근의사유해발굴단”을 구성하여 발굴사업을 공동으로 진행함.
4. 남과 북은 안중근의사의 유해공동발굴 및 확인, 봉환과 관련한 사업을 진행하면서 안중근의사를 기념하는 사업을 지원함.

나. 2차 실무접촉 | 우리 정부는 안중근의사 유해위치 관련 자료를 10월 21일 북한에 관문점을 통해 전달하였다. 이와 함께 북한의 발굴 및 연구자료와 함께 우리측 자료에 대한 검토의견을 조속한 시일 내 전달해줄 것을 요청하면서, 향후 공동추진일정 등에 관한 협의를 위해 가급적 11월 중에 2차 실무접촉을 가질 것을 제안하였다.

북한은 11월 3일 전통문을 보내와 ‘안중근유해발굴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는 유해위치를 정확히 확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쌍방이 그와

관련한 연구사업을 보다 깊이 있게 추진하면서 필요한 의견교환도 진행해야 할 것' 이라고 하면서 11월 17일에 2차 실무접촉을 가질 것을 제의해 왔다. 이에 우리 정부는 이 날이 '순국선열의 날' 임을 감안, 11월 22일로 일자를 변경하자고 수정제의하였다. 11월 14일 북한은 우리 정부의 수정제의에 동의를 하면서 1986년 여름 중국 여순에 파견하였던 유해발굴조사단의 사업결과를 요약·정리하여 보내왔다.

2차 실무접촉은 예정대로 11월 22일에 열렸다. 북한은 우리 정부가 주장하는 유해위치가 북한에서 이전에 조사했던 곳과 일치하여 발굴의 의미가 없으므로 동절기 동안 일본측으로부터 좀 더 새로운 자료를 수집해야 하며, 위치가 확정 되는대로 내년 봄에 발굴사업에 착수할 수 있도록 하자는 입장을 고수하였다.

우리측은 우리가 제기하는 위치가 북한이 이전에 답사했던 위치와 다를 수 있음을 설득하면서 최선의 대안으로서 추가 자료수집을 하기 보다는 현지답사를 겸한 전문가회의를 개최할 것을 촉구하였다. 그러나 북한측은 현지답사와 전문가회의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하지만 이번 실무접촉은 양측 자료에 대한 의견을 충분히 교환했다는 것을 성과로 삼고 앞으로 연구를 계속 해나가는 정도에서 마무리하자고 주장하였다. 그 결과 양측은 이번 실무접촉의 의의 및 향후 추진방향 등을 담은 공동보도문을 채택하는 것으로 2차 실무접촉을 마무리 하였다.

공동보도문 요지

1. 남과 북은 안중근의사의 유해위치와 관련하여 그동안 양측이 연구한 결과에 대해 의견을 충분히 교환하고, 유해공동발굴사업에 대한 의지를 재확인하였음.
2. 남과 북은 안중근의사의 유해를 발굴하기 위해서는 정확한 위치확인이 가장 중요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 하고, 위치확인을 위한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기로 하였음.
3. 남과 북은 현지답사 이전까지는 관련 자료의 조사 및 연구를 지속적으로 추진해나가기면서 조사 및 연구의 결과자료를 교환하기로 하였음.
4. 남과 북은 안중근의사의 순국기념일인 내년 3월 26일을 계기로 유해발굴사업을 시작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기로 하였음.
5. 이와 관련된 사항들을 판문점을 통하여 계속 협의해나가기로 하였음.

6. 단일팀 구성을 위한 남북체육회담

북한은 10월 21일 대한올림픽위원회 위원장 앞으로 전통문을 보내와 제4회 동아시아경기대회('05년 10월 29일~11월 6일, 마카오) 기간 중 양측 올림픽위원회 부위원장을 대표로 하여 남북단일팀 구성과 관련한 실무회담을 진행하자고 제의해왔다. 우리 정부는 10월 24일 전통문을 보내 5명의 대표단을 파견할 예정이라는 것과 실무접촉을 10월 30일부터 11월 3일 안에 효율적으로 진행해나가는 안을 북한에 전달하였다.

11월 1일 마카오에서 이루어진 접촉에서 남북 양측은 12월 7일 개성에서 단일팀의 선수선발과 구성 및 훈련 등 세부사항을 협의하기 위한 체육회담을 개최하고, 양측 올림픽위원회 부위원장을 수석대표

로 적정수의 대표들로 구성한다는 보도문을 작성하였다. 북한은 11월 17일 조선올림픽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전통문을 보내와 12월 7일 개성에서 열리는 체육회담에 대한 합의를 재확인하였다. 우리 정부는 11월 18일 이에 호응하는 전통문을 전달하였으며, 대표의 수는 남북 양측 각기 5명으로 정해지게 되었다.

쌍방 대표단 명단

| 구분 | 남한 | 북한 |
|------|--------------------|-------------------------|
| 수석대표 | 박성인(대한올림픽위원회 부위원장) | 리동호(조선올림픽위원회 부위원장) |
| 대표 | 김상우(대한올림픽위원회 명예총무) | 손광호(조선올림픽위원회 부서기장) |
| | 안민석(대한올림픽위원회 상임위원) | 정해남(조선올림픽위원회) |
| | 임병철(통일부 과장) | 박일남(체육지도위원회 대외사업국 책임부원) |
| | 오영우(문화관광부 과장) | 김영철(조선올림픽위원회/아태 참사) |

12월 7일 회담에서 남북 양측은 오전 전체회의에서 각자의 입장을 담은 기초발언을 통해 단일팀 구성의 의의와 함께 기본 입장을 밝히고, 오후에 이루어진 4회의 실무대표접촉을 통해서 보다 구체적으로 단일팀 명칭, 단기, 단가, 선수선발 원칙 및 임원구성, 훈련 등에 대해 각자의 대안과 이유를 제시하였다. 그러나 서로의 입장 차이를 확인하는 선에서 일단 논의를 마무리하고, 각자 충분히 검토를 하면서 앞으로 계속 단일팀 구성 문제를 협의해나가기로 하였다.